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12

December 2015 vol.129



이달의 이슈

• 2016년 서울 경제 관련 10대 트렌드



생생리포트

서울 혁신지수
(Seoul Innovation Index)



인포그래픽스

서울 시민들은 올해의 소득과
소비 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경제동향

요약/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HOT ISSU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경제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연구책임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장윤선 (연구원), 최윤진 (연구원)

편집위원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위원), 김범식 (연구위원), 김묵한 (연구위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이해우 (과장), 김선수 (팀장), 나성조 (주무관)

발행일 매월 말

발행처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소 (우06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3

팩스 (02)2149-1289

홈페이지 www.si.re.kr

*본 간행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이슈

- 06 | 2016년 서울 경제 관련 10대 트렌드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최윤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정의영(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前연구원)

생생리포트

- 38 | 서울 혁신지수(Seoul Innovation Index)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의영(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前연구원)

인포그래픽스

- 56 | 서울 시민들은 올해의 소득과 소비 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조달호(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동향

- 62 | 요약
63 | 생산
65 | 소비
66 | 고용
69 | 물가
70 | 부동산
72 | 금융
77 | 수출입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최윤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경제통통

- 84 | FOCUS / ZOOM IN
김가영(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이달의 이슈

2016년 서울 경제 관련 10대 트렌드

1. 중국경제의 고성장 종식
2.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금융 불안정
3. 일본의 엔저공습
4. 한국경제 침체 지속
5. 구조적 소비부진
6. 가계부채 부담 현실화
7. 청년·고령층 고용시장 양극화
8. 청년 나홀로족 증가
9. 전세의 월세전환 급증
10. 젠트리피케이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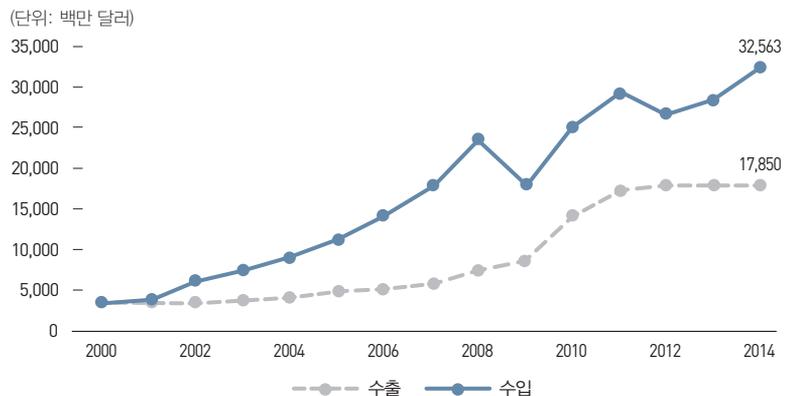
정의영 前연구원 altophone@hanmail.net

이달의 이슈 | 01

2016년 서울 경제 관련 10대 트렌드

1. 중국경제의 고성장 종식

- 서울의 대(對)중국 수출은 최근 4~5년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정책기조 변화, 한·중 간 기술격차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부품·소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국의 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서울도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성장 둔화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음
- 서울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된 주요 요인은 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②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③ 한·중 간 기술격차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1〉 서울시 대중국 수출입 연도별 추이

자료: 무역협회(stat.kita.net)

- 중국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을 통해 고속성장 시대 종언을 공식

- 화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둔화 현상은 비가역적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0년 8.43%에서 2007년 14.19%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7.42%를 기록
 - 중국 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1년 만의 최저 수준인 7% 내외로 하향 조정하고 '신상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 진입을 공식화하여 고속성장 시대의 종언을 고함
 -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단기적으로 과잉투자과 재고누적,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후유증과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의 한계, 금융위기 이후 교역환경 악화 등에 원인이 있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률이 저하되는 불가피한 흐름에 있는 것으로 평가

〈표 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항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 성장률(%)	12.7	14.2	9.6	9.2	10.4	9.3	7.8	7.8	7.4
경상수지 흑자(억 달러)	1,324	2,318	3,532	4,206	2,433	2,378	1,361	2,154	1,828

자료 한국은행

- 중국 정부는 2015년 및 2016년에 7%대 성장을 공언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경제분석 기관들은 중국이 새롭게 조정한 경제성장 수준보다 낮은 6%대 성장률을 전망
-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세계경제 불황으로 예전만큼 수출 성과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도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누적과 과잉투자 등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
-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이후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시중에 풀린 자금이 주로 국유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좋은 대기업 위주로 편중 공급되어 실물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는 급작스러운 경기 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나 오히려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한국과 서울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될 우려
 -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조 개혁이나 예기치 않은 경기 충격에 따른 급작스러운 경기 하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평가절하는 오히려 실물경제와 중국 및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중국, 더 나아가 세계 경기 전반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개선시키는 한편, 한국 제품의 위안화표시가격을 상승시켜 한국 및 서울의 대중수출을 감소시키는 위협요소가 될 우려

- 중국 정부는 기존 투자와 수출주도 고도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수 시장 육성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
 -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 육성, 중산층 증가를 통한 소비 주도형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 인프라 투자, 서비스와 온라인시장 중심으로의 소비 전환, 내륙지방 개발, 환경보호 등 전반적 경제구조 전환과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 ('12차 5개년 계획' 등)
 - 기존의 저임금을 무기로 한 노동 집약형 단순 가공 제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①으로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
 - 특히 기계·제조·공정과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급격히 좁아져 기술이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은 감소하고 신성장 산업분야에서의 기술경쟁은 가속화될 전망

- 한·중 FTA와 중국의 경제변화(성장둔화, 정책기조 변화, 기술격차 감소)를 새로운 대중 경제 전략수립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수출품목 전환, 첨단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등 대중 무역 다변화, 신흥국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
 - 중국의 부품, 기계, 섬유 등 중간재 자급률 확대로 국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므로 한국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대중 경제전략 수립이 필요
 - 중국의 지역 개발, 내수 육성 정책에 대응하여 기존의 가공무역이나, 부품·소재 중심의 수출 품목에서 소비재, 자본재들로 수출 품목 전환을 고려할 필요
 - 첨단산업, 환경, 인프라, 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산업, 온라인 시장

①

중국 정부는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제조업, 신소재 산업)을 지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

등 대중 무역 분야를 다변화하고 이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증점 지원할 필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같이 떠오르는 신흥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

2. 미국의 금리 인상 및 금융 불안정

- 미국의 실물경기 지표 개선과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 연준(FRB)은 2015년 양적완화를 종료하였으며, 2016년부터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인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화폐의 평가절하와 저금리 상황이 수년간 지속됨. 그러나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는 이 기간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늘어나게 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를 야기
 - 유럽 경제의 부진,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전략의 추동력 약화 등 선진국들의 경제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고용지표 개선을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미 연준은 이와 같은 실물경기의 회복세와 향후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양적완화를 종료하였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
 -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단기간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전망
-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은 현대 경제에서 다방면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비 중
 -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자본의 흐름이 자유롭고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은 현대 경제에서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 충격에 서서히 적응할 여지가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어느 정도 대비
-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을 야기할 전망
 - 신흥국에서의 해외자본 유출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 부담 증가, 기업의 투자 손실 발생,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따른 실물경기 충격 우려

- 특히 미국의 경기변동은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출, 국내의 금리 인상,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이로 인한 수출 및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이슈
-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가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자본이 국내 우량자산 투자에 집중된 만큼 자본유출은 제한적일 전망
 - 국내의 금리 인상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한국과 서울의 가계부채를 악성화하고 가계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투자 손실 발생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
 -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시장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이 주로 우량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 유출은 제한적일 전망
- 국내 실물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즉각적인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
 - 실물 및 체감 경기 부진, 가계부채 문제, 일본의 적극적인 엔저 전략, 2017년 대선을 앞둔 국내 상황 등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즉각적인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추세를 따라갈 전망
 - 국내 경제의 위험한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은행, 정부 차원에서 채무 조정을 포함한 여러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시도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가계 부채 조정안 등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미국의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야기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 실적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엔저와 세계경제 부진으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실적을 개선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일본이 엔저 전략으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 수출실적 개선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한편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유도하여 소비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내수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와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 실물경기에는 부(-)와 정(+)의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주기적인 경기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에 발생할 경제 충격에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

3. 일본의 엔저공습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 집권한 이래 ‘아베노믹스’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 ‘아베노믹스’는 ① 공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 ② 대규모 양적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통화정책, ③ 민간투자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성장 전략의 3개 축을 골자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
- ‘아베노믹스’는 ① 공공 투자 확대, 본원 통화 증가 → 총수요 증가+유동성 확대 →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 내수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 ② 엔화 가치 하락 →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 → 해외 수요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목표로 극단적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국내·외의 수요 창출이 전략의 핵심

〈표 2〉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본원통화 (십억 엔)	101,261	105,848	109,507	125,079	138,475	201,847	275,874
경제성장률 (%)	-1	-5.5	4.7	-0.5	1.7	1.6	-0.1
실업률 (%)	4	5.1	5.1	4.6	4.4	4	3.6
니케이 225 지수(P)	8,859	10,546	10,228	8,455	10,395	16,291	17,450

자료 한국은행

-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으로 정책 지속성에 따른 신뢰가 실물경제에 차츰 반영되면서 경기부양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10월 일본 중앙은행의 2차 대규모 양적완화 계획 발표, 2014년 11월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 2014년 12월 자민당 연립 여당의 중의원 선거 승리, 2015년 8월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유지 발표² 등이 있었고 내년에도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고 지속될 전망

- 이와 같은 경기부양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시장의 신뢰를 차츰 확보하면서 실물경제에 경기부양의 효과가 점차 더 확대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지나친 투자 확대에 의한 재정부담 증가, 아베노믹스의 추동력 약화, 엔저 효과의 둔화, 과도한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 발생 등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

〈표 3〉 엔/달러, 원/엔 환율 반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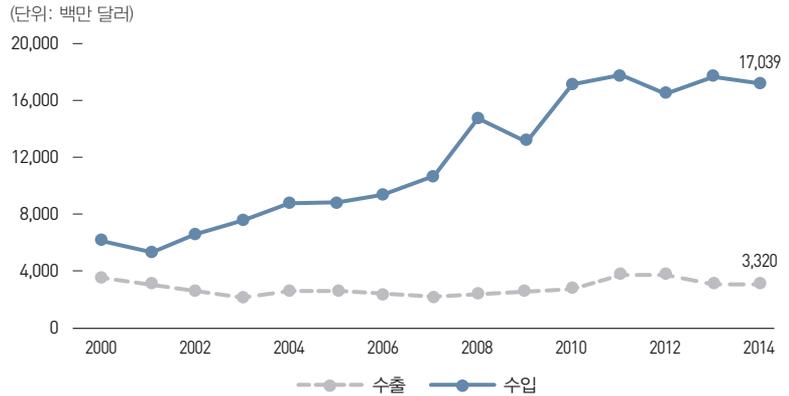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엔/달러	91.4	84.2	82.0	77.6	79.8	79.9	95.5	99.7	102.5	109.2	120.3
원/엔	1,262.5	1,375.9	1,344.2	1,436.5	1,432.3	1,394.4	1,156.4	1,091.0	1,024.3	969.0	913.9

자료 한국은행

- 실물경기 충격에 따른 여파와 대외경제의 악조건 지속으로 실물경기 회복 저조
 -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경기 충격(원료 수입 증가, 생산시설 파괴, 일본 브랜드에 대한 불신 등), 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대유럽 수출 감소, 세계 경기침체, 신흥국 금융불안, 글로벌 경쟁심화 지속으로 일본의 수출실적 지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수출기업의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현지 재투자 및 준비금 비축 등을 통해 일본 내에 제한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실물경기의 회복 수준은 약할 전망
- 한편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장기적인 기업경쟁력은 향상될 전망
 - 과거에는 아베노믹스의 효과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본기업의 신뢰가 부족하여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기업들이 수출 단가 인하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 단가를 인하하는 등 엔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격 공세에 나서고 있음

² 일본은행은 2015년 8월 7일 금융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본원통화 규모를 연간 80조 엔으로 늘리는 현행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기준 금리도 이전과 동일한 0.10%로 동결하였고 물가상승률이 2%로 유지될 때까지 현행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개선된 영업 이익을 차세대 기술 개발 등 장기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여 향후 장기적인 기업경쟁력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



〈그림 2〉 서울시 대일본 수출입 연도별 추이

자료 무역협회(stat.kita.net)

- 서울의 대일본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임. 엔화 약세의 지속으로 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한편, 일본관광객은 감소해 서울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서울의 대일본 수출은 2012년 38억 달러에서 2014년 33.2억 달러로 12.6%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166.5억 달러에서 170.4억 달러로 2.3% 증가
-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서울 경제도 직·간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엔화 약세와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의 수는 2010년 300만 명에서 2014년 230만 명으로 감소

-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 하에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제품경쟁력 확보,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
- 아베노믹스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서구권, 중국 등 타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한 상황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과 공공·기업 부문의 연구개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물리적인 도시 정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콘텐츠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서울시가 갖는 도시로서의 매력과 비교우위를 특화하여 개발할 필요

4. 한국경제 침체 지속

- 2016년의 한국경제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발 경기불안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이 사라짐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내년도 소비는 다소 개선될 전망
 -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높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한계가 예상되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압력으로 금융완화 정책도 어려울 것으로 기대되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대 수준에 머물러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 전망
 -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전망
-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거비부담 증가와 노후불안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로 민간소비는 1~2%대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가격 하락과 주택경기 호조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등으로 소비심리는 일부 개선될 전망
 - 월세 전환 및 가계부채 증가로 주거비 및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후불안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여 소비 증가세가 제약
- G2 리스크 및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5년의 주택분양 급증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돌 전망
 -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빠른 설비 확장으로 석유화학, 철강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의 성장 전망이 밝지 않아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대를 밑돌 전망
 - 늘어난 주택분양이 투자로 이어져 내년도 주택건설 투자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돌 전망
 - 대기업 중심의 장기프로젝트 추진, 연구 인력 확충으로 R&D 투자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핀테크(FinTech),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의 S/W수요 증가 예상

- 상품수출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으로 대중수출은 다소 부진할 전망
 - 휴대폰과 디스플레이패널 수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반도체는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선박은 2014년 이후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겠으나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
 - 통관수출은 그동안 큰 폭의 부진을 보였던 비(非)IT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반면, 무통관수출은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효과 지속, 해외진출 수출기업들의 부품 현지조달 확대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흑자 규모는 930억 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
 - 상품수지는 저유가 및 낮은 국제원자재 가격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수입상승폭이 수출증가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흑자규모는 다소 축소될 전망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및 가공서비스수지 등에서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중동지역 수주감소로 건설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면서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득수지는 이자소득 등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될 전망

- 농산물 가격 및 수입 물가의 상승,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인상이 예상되나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유발요인 부재로 저물가 기조 지속 예상
 - 내년에는 유가 하락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며, 농산물가격은 재배면적 축소, 지난해 가격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요금 인상과 집값 상승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수요 위축에 따른 물가상승 둔화 압력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폭도 크지 않아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서울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심리 개선에 따라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될 전망이나 주요산업인 서비스업의 침체로 경기는 2016년에도 여전히 부진할 전망
 - 서울은 소비심리 개선으로 작년에 비해 민간소비의 회복이 예상되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자부담 증가는 소비 회복을 더디게 할 전망이다

- 시장 포화와 과당 경쟁의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교육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성장세가 둔화

•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부양정책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

- 경기부진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현상이므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

- 신규 산업이 많이 나타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5. 구조적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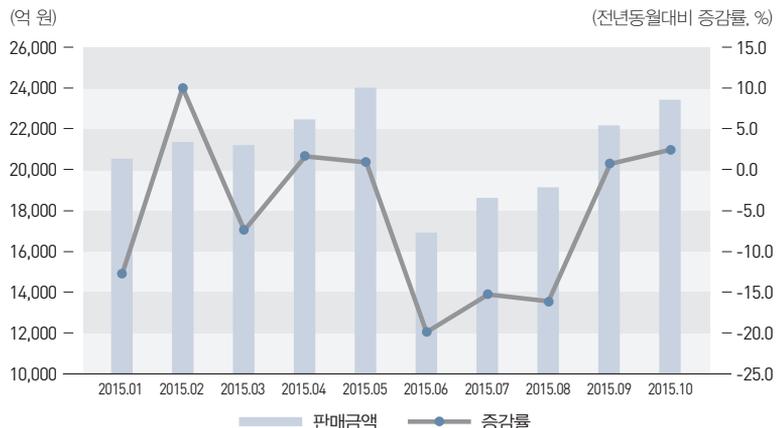
• 2015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월부터 5월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6월 메르스 영향으로 대폭 하락한 후 9월부터 회복

- 2015년 상반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6월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 대폭 하락하여 전년 동월 대비 15.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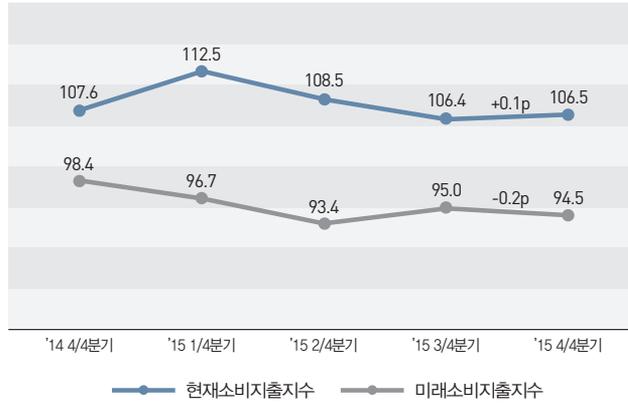
- 7월, 8월의 판매액은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부진하다가, 추석과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하여 회복 추세

• 서울시민들은 현재 소비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소비는 더 축소될 전망(서울연구원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 2015 4/4분기)

- 현재 소비지출지수는 106.5로 나타났고, 미래 소비지출지수는 94.8로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해 향후 소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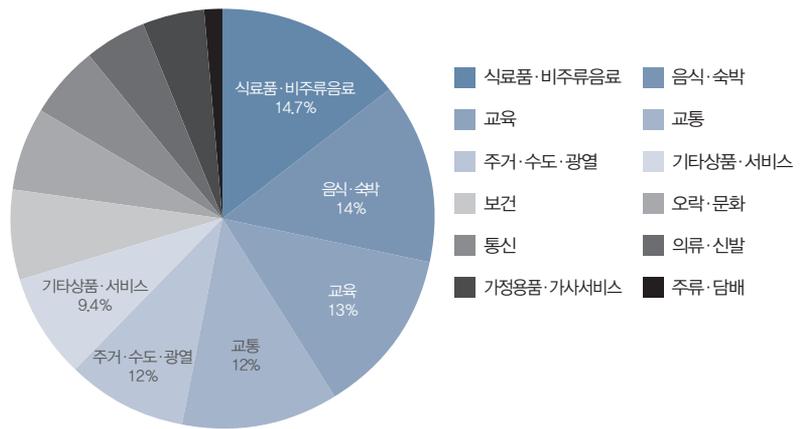
〈그림 3〉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그림 4〉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자료 서울연구원 소비자체감경기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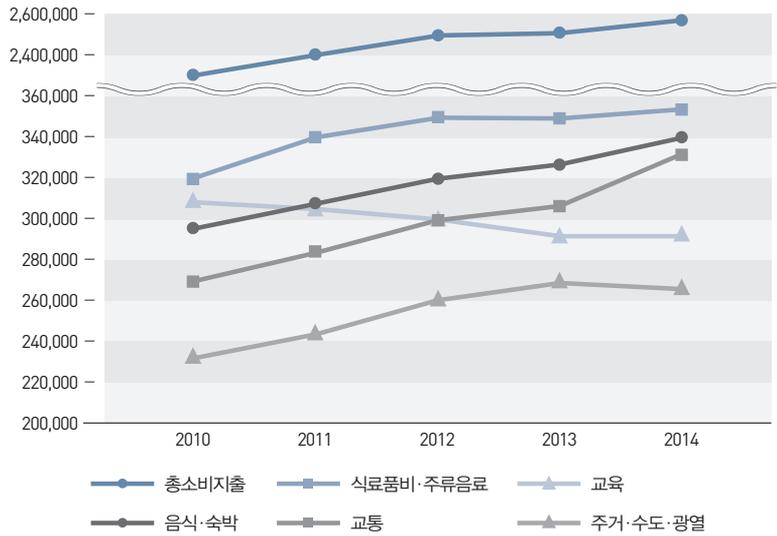
- 도시 2인 이상 가구^③의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은 주로 생활비 중심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3/4분기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 부문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이 378,538원(14.7%)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음식·숙박' 361,895원(14.0%), '교육' 334,795원(13.0%), '교통' 310,429원(12.0%), '주거·수도·광열' 241,529원(9.4%) 순으로 50% 이상이 생활 소비로 나타남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대 소비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생활과 밀접한 소비는 증가하거나 조금 감소한 반면, 2010년 2순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교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문에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 반영



〈그림 5〉 2015 3/4분기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 비중

③ 도시가구
: 도시지역의 가구원 2인 이상인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6〉 도시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 5대 부문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소비성향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가계흑자율과 저축률은 증가 추세 지속
 -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 76.1, 2014년 72.9를 거쳐 2015년 2/4분기에는 71.6까지 하락하였으나 가계흑자율은 2011년 23.9, 2014년 27.1을 거쳐 2015년 2/4분기에는 28.4까지 상승
 - 가계 순저축률은 199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상승하는 추세

〈표 4〉 가구 평균소비성향, 가계흑자율, 순저축률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1/4	2015 2/4
평균소비성향	76.1	74.1	73.5	72.9	72.5	71.6
가계흑자율	23.9	25.9	26.5	27.1	27.5	28.4
가계 순저축률	3.39	3.42	4.9	6.09		

주 평균소비성향과 가계흑자율은 도시 2인 이상 가계 대상이며, 가계 순저축률은 전국 대상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 2016년도 민간소비는 메르스 기저효과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 고용 불안 및 노후 불안으로 소비 증가율은 완만할 전망

- 민간소비는 메르스 충격이 사라짐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부진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화될 가능성
- 월세 전환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주거비 및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청년 실업률이 11.1%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불안에 따른 청년층 소비 둔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50~60대의 예비적 저축 증가는 향후 소비성향 위축 요인으로 예상

6. 가계부채 부담 현실화

- 국내 가계신용 규모는 1,160조 원을 돌파했으며,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
- 국내 가계신용 규모는 2015년 3분기 기준 1,166조 원이며,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신용의 66.9%인 780.6조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29.7%)과 경기(24.3%) 지역에 집중
- 서울의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총액은 2015년 10월 기준 235조 1,43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
-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전년(8,924만 원) 대비 5.0% 증가한 9,366만 원으로 전국(6,181만 원) 평균보다 51%나 크게 나타남

- 국내 가계부채의 상당액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LTV와 DTI 규제 완화, 대출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
- 2014년 8월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LTV^④, DTI^⑤ 규제 완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
-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신용의 41.2%(480조 725억 원)를 차지하여 국내 가계부채의 상당액이 부동산 구입형 대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

④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한도 (예: LTV가 60% 일 때 시가 2억 원 아파트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

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

-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함. 2016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
-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유도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07.22.)'이 본격적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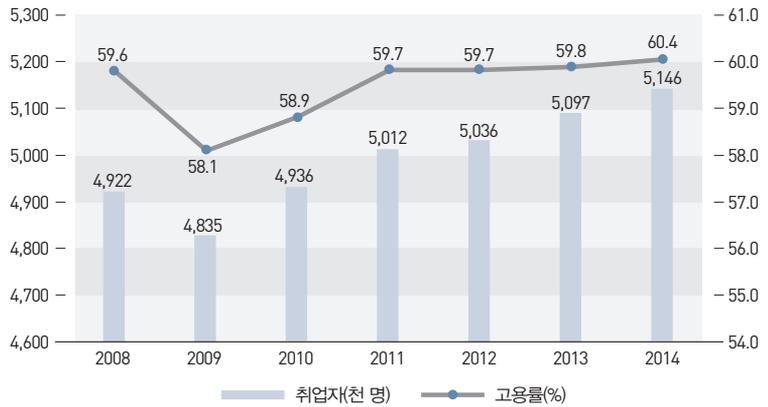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자영업자의 부채급증과 내년도 주택분양 물량증가로 가계부채 증가가 예상되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
- 2016년에 본격화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한계가구는 파산에 직면할 우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부진이 심화되고 일부 한계가구는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 증대
 - 정부의 분할상환 유도정책은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계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활력을 저해할 우려
-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 관련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창업 및 생계형 소액대출과 채무조정제도, 적금형 서민금융상품을 지원 중
 -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상담, 재무설계 및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함. 지금까지 총 130건에 대한 파산면책 결정 승인과 총 150여억 원의 가계부채를 탕감
 - 기존에는 창업과 가계운영을 위한 소액대출(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나 채무조정제도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왔으나, 최근에는 목돈 마련을 위하여 매달 입금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적금형(희망플러스통장 등) 서민금융제도를 운영
 -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지원제도에는 새희망홀씨(국내은행), 미소금융(미소금융지점), 햇살론(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바뀐드림론(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음
-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단기적인 금융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더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소득과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단기적인 금융리스크 완화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궁극적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부채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증대 정책의 활성화 필요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제도에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며, 상환여력 부족 등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한계가구에 대한 대응책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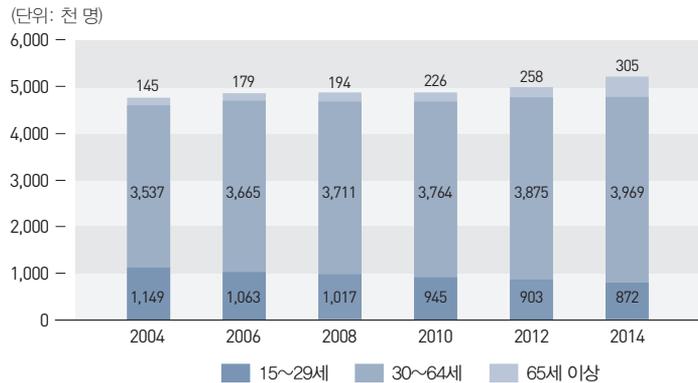
-부채탕감과 같은 가계부채 문제해결 전략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자영업자 대출과 비주택대출 등에 대한 선별적인 대출 관리 강화정책 필요

7. 청년·고령층 고용시장 양극화

-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한 반면, 실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
- 2014년 기준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538.2만 명, 취업자 수는 약 514.6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3.2%, 고용률은 60.4%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 관련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가 2009년부터 계속 좋아지는 추세
- 2014년 기준 실업자 수는 24.1만 명, 실업률은 4.5%로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각각 24.4만 명, 4.7%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상승 반전



〈그림 7〉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와 고용률



〈그림 8〉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수

- 서울의 청년층 취업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고령층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령별 취업자 분포가 변화하는 양상
 - 2014년 말 기준 서울시 취업자 수는 51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함. 50대 이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취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50대 이상은 6.5% 증가한 반면, 20대는 1.9% 감소)
 -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령층(65세 이상) 취업 비중이 2004년 3.0%에서 2014년 5.9%로 10년 동안 2.9%p(16.1만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 비중은 2004년 23.8%에서 16.9%로 같은 기간 6.9%p(27.7만 명) 감소하여 청년층 취업이 감소하고 고령층 취업은 증가하는 장기적 추세가 확인
 -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인구 고령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취업시장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년 증가해 경제활동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
 - 2014년 말 기준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7%로 전년(51.4%) 대비 1.1%p 증가하고, 고용률은 51.4%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하여 여성 고용지표가 금융위기 당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서울시 여성의 실업률은 4.4%로 전년(3.7%) 대비 0.7%p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추세는 2008년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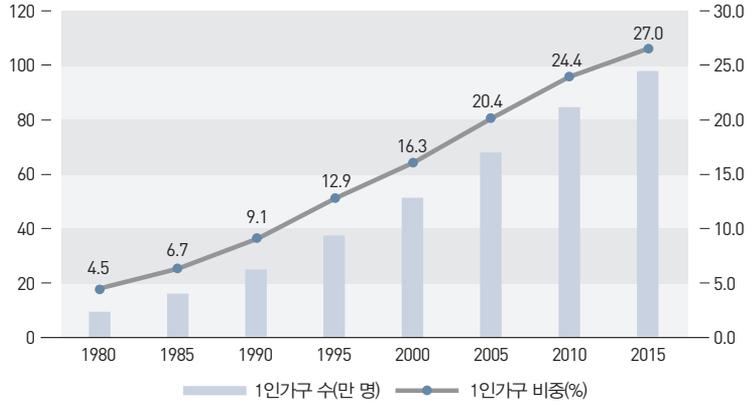
- 서울시 여성 취업자는 30·40대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육아, 결혼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50·60대 취업자는 급증
 - 서울시의 여성 취업자는 30대(23.1%) 비중이 가장 높고, 40대(22.5%), 50대(21.6%), 20대(21.1%) 순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50대와 60대 취업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각각 7.4%, 10.7%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1.7%, 5.0% 감소
 - 서울의 15~54세 기혼여성(178.8만 명)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18.5%(33만 명)로 전년 대비 1만 명(3.0%)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육아(40.1%)인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기술교육·직업훈련,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매년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 서울시는 매년 서울형 뉴딜일자리(1,500여 명), 공공근로사업(4,300여 명), 지역공동체 사업(1,000여 명) 등을 통해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자리 알선과 직업교육, 창업교육을 제공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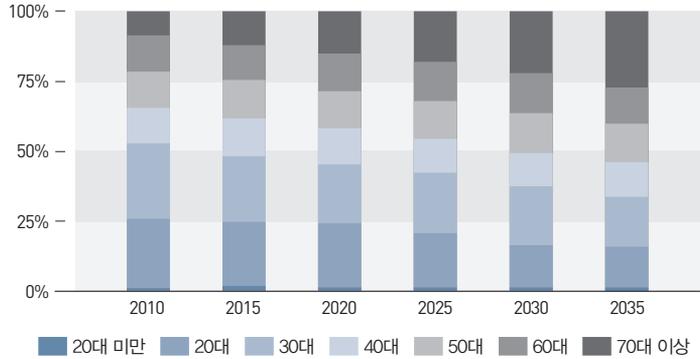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고용정책이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된 점과 중앙정부와의 사업 중복은 한계로 지적되며 서울시의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모델 개발이 필요
 - 서울시의 380여 개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이 72.1%(2013년 기준)를 차지함. 고용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일자리 사업에 의존
 -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여 산업정책과 일자리사업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산업-고용정책의 전략 수립이 필요

8. 청년 나홀로족 증가

- 전국의 1인 가구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서울의 1인 가구는 20·30대의 젊은 층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1980년 82,447가구에서 2015년 981,574가구로 35년 사이에 약 11배 증가함(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자료 기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980년 4.47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5년 6월 말 기준 서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나타남
 -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이 27.1%, 서울이 27.0%로 차이가 나지 않으나, 전국의 1인 가구는 70대 이상(20.9%)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서울의 1인 가구는 20대(23.7%)와 30대(23.3%)의 비중이 매우 높아 서울이 상대적으로 젊은 1인 가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음



〈그림 9〉 서울시 1인 가구 수, 비중 추이



〈그림 10〉 서울시 1인 가구 연령대별 구성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사회·경제적 변화로 비(非)혼가구, 노인 독신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 1인 가구 구성요인이 20·30대에서는 미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사별이라고 볼 때, 서울시의 높은 20·30대 1인 가구 비중은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미혼의 증가가 원인
 - 취업난과 고용불안, 높은 주거비 부담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지출 압박에 직면한 20·30대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
 -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서울에서도 20·30대 젊은 1인 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노인 독신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울시 1인 가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는 이유가 '직장과의 거리' 때문으로 거주지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은 '교통'과 '경제적 여건'으로 나타남.

<표 5> 서울시 1인 가구 설문조사(서울연구원, 2015) 주요 결과

1. 혼자 생활하는 이유	2. 거주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
1) 직장과의 거리(51.5%) 2) 가족으로부터 독립(37.1%) 3) 함께 있던 가족의 이주, 사망(14.0%) 4) 취업/진학/고시 등 준비(11.2%)	1) 교통 여건(62.7%) 2) 경제적 여건(61.2%) 3) 치안(22.0%) 4) 생활환경(21.4%)
3. 혼자 살면서 힘들다고 느낀 부분 (10점 만점)	4.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1) 경제적 측면(6.77점) 2) 감성적인 측면(6.21점) 3) 거주안정성(4.59점) 4) 주변의 시선(4.38점)	1) 응급상황에 대응 및 대처(51.2%) 2) 주거활동(31.8%) 3) 밥먹기(30.5%) 4) 일상생활(20.9%)
5. 주요 개인적인 고민거리	6. 공공부문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부분
1) 경제관련 문제(61.4%) 2) 건강(26.2%) 3) 노후생활(25.8%) 4) 자기개발(17.9%)	1)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지원(65.3%) 2)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54.6%) 3) 치안/방법, 안전성 강화(26.1%) 4) 지역복지 서비스(22.1%)

-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공동체주택과 같은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지원하여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 중
 - 서울시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원룸주택, 여성안심주택, 희망하우징(대학생 대상)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은 지속
 - 최근에는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등장한 공동체주택(share house)⁶ 보급을 위하여 공동체주택 건설/임차 용자 지원, 공공토지 임대, 빈집 활용 리모델링비 지원 정책을 시행
 - 또한 사회적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적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적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세대융합형 룸셰어링(room sharing)*과 같은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공유가치에 바탕을 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 *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한지붕 세대공감)을 시행
- 서울시 1인 가구의 다수가 20·30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공급을 확대해나가되 장기적으

⁶ 공동체주택은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모델로서, 공동체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함.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 유형은 자가소유형, 사회임대형, 공공임대형 등이 있음

- 로는 점차 노인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
- 경제적 자립도가 낮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 학교/회사 근처 거주를 선호하는 20·30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공유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 여성과 노인 독신가구의 주거안전성을 위한 방법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노인 독신가구에게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존의 물리적 시설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

9. 전세의 월세전환 급증

- 최근 서울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월세시장은 꾸준히 확대
- 2015년 11월 현재 서울의 전세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1%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7% 증가함. 월세거래량이 전체 전·월세거래량의 45.4%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게 확대
- 아파트는 월세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7.4%p 증가한 약 34.4%를 기록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월세거래 비중이 약 2.5%p 증가하여 전·월세 거래의 절반가량을 차지

〈표 6〉 연도별(1~11월 누계기준) 월세 비중

[단위: %]

	전세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국	39.3	41.0	44.1	31.7	33.7	38.5	45.9	47.2	48.7
수도권	36.3	38.3	42.1	27.5	30.3	36.1	43.2	44.5	46.4
서울	38.3	40.1	44.5	24.1	27.0	34.4	46.5	47.5	50.0
지방	45.1	46.5	48.0	38.7	39.6	42.2	52.0	53.6	54.0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12.14.)

- 과거에는 고금리와 집값 상승, 금융기관 대출의 어려움으로 전세가 대세였으나 거시적 환경변화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큰 흐름이 형성
- 임대업자들은 저금리에 따른 전세수익률 감소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른 매매차익 감소로 전세임대를 기피
- 세입자들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부동산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있어도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주택매입 대신 전세

거주를 선택함. 또한 저금리 기조로 전세 거주 비용이 낮아져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

- 전세 공급 기피와 수요증가가 맞물려 전세가격이 급등함. 서울의 전세가격은 '12년 말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 최근 3년 동안 전세가격 지수가 20.1% 증가함.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격 증가율(24.9%)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 주택의 월세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도기적 형태로 반전세⁷가 등장하였고 빠른 속도로 전세를 대체하는 주거형태로 확산

- 월세로 내놓고자 하는 집주인과 전세 거주를 선호하는 세입자의 타협 결과로 보증금을 전세보다 낮추는 대신 그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등장

- 이에 따라 당분간 전세나 월세보다 반전세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집값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는 순수월세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

• 전세 주택의 월세 전환이 진행되더라도 전세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

-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운 고가 주택,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임대인, 보증금을 활용한 증여 관행 등으로 전세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월세시장 확대에 특히 젊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예상

- 서울에는 대학진학과 취업에 따른 20대 전입이 매년 평균 2.6만여 명으로 월세 확대에 인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심각해질 우려

- 핵심 경제활동 주체인 30~40대 가구는 자녀양육에 맞는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워 매년 평균 6만여 명의 인구가 유출

- 전세 가구주 절반 이상이 45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월세 전환 시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향후 세대 간 갈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⁷ 보증부 월세는 세입자가 보증금과 함께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월 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와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사이에 존재함.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전세가격의 60%를 넘으면 준전세(반전세), 10~60% 사이면 준월세, 10% 이하면 월세로 구분

• 서울시는 늘어나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고자 매년 1만 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 중

- 서울시는 '10년부터 매년 평균 1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14년 6월 말 기준 총 22.2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

- 한편 공동체 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리츠와 같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노력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고령, 긴급위기 가구 등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는 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용자 지원
-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기존 임대주택 보급과 더불어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가 필요
 - 기존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시설부지 등 시유지를 활용한 공급, 기존의 공공시설 복합화에 의한 공급, 민간토지임차방식에 의한 공급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필요
 -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조건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개보수 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저렴한 월세주택 재고를 확충할 필요
 - 수요대응형 임대주택 개발을 확대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미혼가구,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사회임대인(주택협회, 주택트러스트, 주택협동조합 등) 제도와 같이 비영리부문에서도 사회주택 공급자의 등장 및 육성을 도모할 필요
- 월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임대시장 변화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
 - 급격한 월세화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속도를 최대한 늦출 필요
 - 중앙정부의 주택임대시장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매매전환 수요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이 필요

10. 젠트리피케이션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이 세련된 곳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나 최근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대두되고 있음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비싼 임대료를 가진 서울을 떠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 등과 같은 외곽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현상
-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저렴한 임대료를 가진 정채된 지역에 창조계층이 몰려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상승하여 기존 상인들이 그 지역 밖으로 내몰리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되는 현상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핵심 경제활동 주체인 30대가 가장 많이 유출
 - 2014년 서울의 연령대별 이동자수 및 이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10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유출되었으며, 특히 핵심 경제활동 주체인 30대는 38,964명이 순유출되어 전 연령층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
 - 20대 초반에는 학업을 위해 서울로 전입했다가 30대에는 결혼과 자녀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서울 내에서 마련하기 어려워 유출되는 것으로 예상
- 서울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추세이며 대부분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
 - 서울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 이동률이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서울에서 가장 많이 전출하는 타 시·도는 경기(59.1%)이며, 그다음은 인천(7.7%), 충남(3.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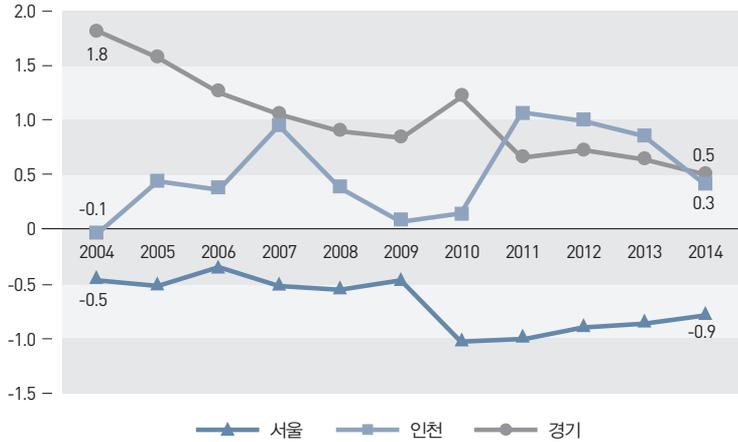
〈표 7〉 2014년 서울 연령대별 이동자 수 및 이동률

[단위: 명, %]

연령대	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이동자 수	-87,831	864	26,300	-38,964	-18,241	-18,431	-13,144
이동률	-0.9	0.1	1.8	-2.3	-1.1	-1.2	-1.4

주 이동자 수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준
 이동률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 / 주민등록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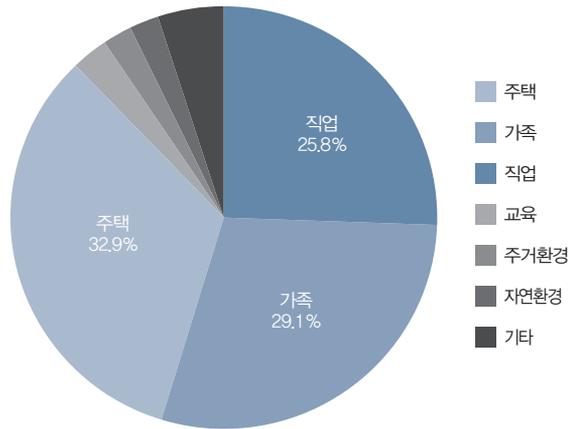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1〉 2004년~2014년 수도권 인구 이동률

주 이동률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주민등록인구*1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2〉 서울에서 타 시·도 전출 사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⑧ '직업'은 취업, 구직과 관련/직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사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임. '가족'은 결혼, 이혼, 별거, 사별/분가 또는 독립/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임. '주택'은 내 집 마련/전세, 월세 등 계약 기간 만기/주택규모 변경, 집세 문제/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등

- 타 시·도로 전출하는 이유의 52%가 '주택'과 '가족'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는 것으로 예상
- 서울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이유는 '주택'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가족' 29.1%, '직업' 25.8% 순^⑧
- 전출 사유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결혼, 가족과의 동거 시 서울의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대부분 가까운 경기도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상
- 2016년에는 전세의 월세전환 급증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강화될 전망

- 지속적으로 치솟는 전세가격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2016년에도 인구가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까운 미래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화두로 떠오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서울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가진 정체된 지역에 예술가들과 같은 창조계층이 몰려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생기면서 상류층이 유입되는 현상
 -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는 낙후한 지역에 투자를 유발하여 과거보다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도심이 활기를 띠게 함
 - 하지만 지나친 임대료 향상으로 기존의 상인들이 그 지역 밖으로 내몰리고 지역이 본래 가졌던 특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있음
- 최근 서울에서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삼청동, 서촌, 이태원, 신사동 골목 문화에 태생을 둔 상권 발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중

삼청동	서촌
-삼청동은 서울에서 지가가 낮은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인사동 근처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삼청동으로 작업실 및 주거지를 옮겨왔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로 탈바꿈 -하지만 상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고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숍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서 본래 가졌던 예술적이고 독특했던 매력이 상실됨 -현재 내국인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	-서촌은 서울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물 규제로 고층건물이 없고 한옥 형태를 살려 옛 모습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가진 지역이어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이기 시작함 -특히 삼청동의 높은 임대료를 이기지 못한 문화·예술인들 중에는 가까운 서촌에서 새로운 골목상권을 형성하는 데 동참한 경우가 많음 -현재 서촌은 급속스럽게 상승하는 임대료로 인해 삼청동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음
경리단길	가로수길
-이태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까운 경리단길에 이국적인 레스토랑, 펍, 카페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독특한 골목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낮에 유동인구가 많은 서촌과는 다르게 밤에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현재 경리단길도 지나치게 상승한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유입으로 인해 예전에 가졌던 독특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중 -경리단길의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인식됐던 해방촌까지 상권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가로수길은 강남개발 초기 단계에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갤러리, 사진스튜디오, 영화 등과 관련된 소형업체들이 모여들었고 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와 옷가게들을 열기 시작함 -초기에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테라스형 소규모 레스토랑·카페, 디자이너가 직접 운영하는 패션 옷가게들이 많았던 장소였으나, 현재는 기존 업체 대부분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매장과 대기업 SPA브랜드의 점령으로 인해 예전에 가졌던 독특하고 예술적인 개성이 사라짐 -가로수길에서 밀려난 초기 주체들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의 세로수길까지 밀려나면서 상권이 확대

-이외에도 성수동, 홍대, 연남동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개성 넘치는 상권이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본래의 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인사동은 2002년에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이 완화되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현재는 한국 고유문화거리의 모습을 잃었으며 대학로와 삼청동도 각각 문화지구, 디자인거리 특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본래의 독특했던 개성을 잃음

- 각종 특별지구로 지정을 할 때 본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 이미 자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보다는 발전이 시급한 지역 중 발전 조짐이 보이는 지역들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낙후된 지역들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서울시는 특별지구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공표 필요

-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정식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공표

- 이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한 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등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주점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들을 주민협의체가 선별할 수 있게 하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

참고문헌

1. 관계기관 합동, 2015,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2. 관계부처 합동, 2012, “對중국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12.14., “2015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4. 김영도, 2015,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서울경제 2015년 7월호, 서울연구원
5. 남원석·박은철, 2015,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주택 활성화”, 이슈페이퍼, 서울연구원
6. 남원석 외, 2014, “다가오는 월세 시대: 쟁점과 과제”, 이슈&진단 No.142, 경기연구원
7. 머니투데이, 2015.10.14., “자급자족하는 중국…한국 수출길 막혔다”
8. 박은철, 2015,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 서울정책아카이브
9. 산업연구원, 2013, “중국 성장 둔화의 배경과 전망 및 국내 실물경제 영향”,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66호(2013-19)
10. 서울경제, 2015.10.8., “전세난에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서울 인구 1,000만시대 저무나”
11. 서울연구원, 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12. 서울연구원, 2015, 「소비자체감경기 조사」
13. 서울통계, 2015, “통계로 본 서울 고용구조 변화 및 특징”, e-서울통계 90호
14. 송인호, 2015,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갖는 의미는”, 나라경제 2015 4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15. 신정영·김감영, 2014, “도시 공간 구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비판적 재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모색”, 한국지리학회
16. 에너지경제신문, 2015.9.7., “가계빚 관찰을까?”, 전문가 진단-가계부채관리대책
17. 오마이뉴스, 2015.10.11., “말없이 내용증명 날리는 집주인.. 이게 서촌의 현실”
18. 오마이뉴스, 2015.9.23., “갑자기 임대료가 2배” “건물주로서 죄송”
19. 원승연, 2015, “가계부채와 경제활성화”, 주간금융경제동향 제5권 제23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 유영성 외, 2015, “경기도 가계부채 진단 및 시사점”, 이슈&진단 No.199, 경기연구원
21. 이코노믹리뷰, 2015.6.25., “[도시재생의 마법-젠트리피케이션] 舊도시의 반란, 한국식 젠트리피케이션”
22. 임진, 2015, “최근 저축률 현황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4권 23호, 한국은행
23. 전용식, 2015,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서울경제 2015년 7월호, 서울연구원
24. 정성춘, 2015, “2015년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정성춘, 2015, “2015년 세계경제전망(제2차 업데이트)”,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정성춘 외, 2013,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3 No.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7. 조명래, 2013, “젠트리피케이션의 이해”, 월간 문화사회, 2013년 6월호
28. 조선비즈, 2015.8.12., “[포스트모던 이코노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29. 주무현, 2015,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과제”, 서울경제 2015년 6월호, 서울연구원

30. 최성호 외, 2015,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미시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분석 논문, 제21권 제2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31. 한국개발연구원, 2015, “2015 상반기 KDI 경제전망”
3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양회를 통해 본 중국경제 전망과 시사점”, Trade Brief, No.18
33. 한국은행, 2015, “경제전망보고서”
34. 한국은행, 2015,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15-4호
35.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5.10.15., “2015~16년 경제전망”, 보도자료(2015-10-15호)
36.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5.8.25., “2015년 3/4분기 중 가계신용”, 보도자료(2015-8-21호)
37. 허자연 외, 2015,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사업자 변화에 관한 연구: 경리 단길 사례”,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서울연구원
39. 헤럴드경제, 2012.11.5., “문화지구지정 10년 인사동, 스러져가는 소리 들리니?”
40. LGFI 리포트, 2015, “2016년 경제전망”, LG Business Insight
4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미국 양적완화의 종료와 향후 통화정책 전망”, KB 지식비타민(14-84호)
42.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주요내용 및 영향”, CEO MEMO(14-31호)
43.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i.re.kr/statistics-seoul-housing>」
44.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45.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4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47.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서비스, 「<http://stat.kita.net>」





생생리포트



서울 혁신지수 (Seoul Innovation Index)

- I. 서론
- II. 서울 혁신지수 지표 구성과 산출 방법
- III. 서울 혁신지수 산출 결과
- IV. 결론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정익영 前연구원 altophone@hanmail.net

서울 혁신지수 (Seoul Innovation Index)

I. 서론

혁신이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도입되어 기존에 존재하였던 관습, 유행,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서 발명, 발견, 기존 기술의 상용화 등을 통해 신기술,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경영 전략을 이용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때 신기술 혹은 새로운 경영 전략이란 새로운 생산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수단 도입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생산 공정의 개선, 새로운 사업 모델의 채택,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슈페터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혁신을 강조한 이후 기업 경영, 공공 행정, 경제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경제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시장 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식기반산업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다수 국가에서 이들 산업들은 미래 전략사업으로 채택되어 집중적인 투자,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국가는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여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낙오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조직과 기업의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발전 시키고자 하는 학계,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자들의 노력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혁신이 지역 및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국가 혹은 지역의 혁신 잠재력, 혁신 활동 및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혁신 역량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관련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지자체, 연구 기관에 의해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를 통하여 유럽 주요 국가와 도시들의 혁신 역량과 활동을 파악하고 이를 현실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뉴욕 역시 NYCEDC Innovation Index를 통하여 뉴욕이라는 단일 도시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역량을 분석한 연구는 과거 장재홍 등(2006)에서 이루어진 이후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실상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혁신 연구의 대부분이 기업과 국가의 혁신 역량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요컨대, 매력적인 연구 환경과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산업 정책이 각 지자체의 중요한 비전이자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 혁신 활동 실태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혁신지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목적하에 개발되었다. 첫째로, 서울시의 물적·인적 연구개발 여건, 서울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 서울시 연구 개발 활동의 직·간접적 성과 및 지식기반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혁신 종합 지표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둘째로 서울시의 경제 정책적 비전에 맞추어 중앙 정부·지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의 투입 및 성과를 분석하는 정책 평가 지표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요컨대, 서울 혁신지수는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전반적인 혁신 활동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서울시 혁신 역량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현실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의 혁신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제2장에서는 서울 혁신지수의 지표 구성과 산출 방법을 간략히 다룬다. 이후 제3장에서 부문별 혁신지수를 산출하고 제4장에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혁신 활동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서울 혁신지수 지표 구성과 산출 방법

1. 서울 혁신지수의 지표 구성

서울 혁신지수는 뉴욕 혁신지수의 세부 지표들을 벤치마크로 삼되 이를 국내 통계 현실 및 서울시 특수성에 맞도록 응용, 발전시켜 구성하였다. 확정된 지표 구성은 <표 1>에 나와 있다.

<표 1> 서울 혁신지수의 지표 체계

대부문	소부문	지표 항목
투입	R&D	1. 서울시 공공부문 R&D 투자 2. 서울시 기업부문 R&D 투자 3.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재원	4. 서울시 벤처캐피탈 투자액 5. 전국 벤처투자액 대비 서울시 벤처투자액 6.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 공급액 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
	인적 자본	8. 서울시 연구원의 수 9. 전국 총 연구원의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 10.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11.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활동 사업체 수
산출	혁신 성과	1.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 2.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3.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수 4.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 5.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사업화 건수
	경제적 효과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8. 서울시 전체기업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액 비중 9. 서울시 지식산업분야 총 종사자 수 10. 서울시 혁신 기업(벤처+Innobiz+Mainbiz)의 수 11.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서울 혁신지수는 기본적으로 뉴욕 혁신지수의 지표 항목 중 국내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서울 혁신지수의 개발 목적과 서울시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지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적절한 지표 항목으로 생각되거나 국내 통계 여건상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의미가 있는 대리

지표를 새로 정의하여 지표에 포함하였다. 자료의 속보성 원칙에 따라 지표 항목으로 적합하더라도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발표 시점 및 간격이 불규칙한 경우, 적합한 대리 지표를 구축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가 존재하나 세부적인 분류가 부족하여 통계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표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 목표, 서울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지원, 투자, 정책 등의 직·간접적 성과들이 지표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각 지표의 의미, 선정 근거, 통계자료원 등은 서울 혁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서울 혁신지수는 투입과 산출의 두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여기서 투입은 혁신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와 공공이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뜻하며, 산출은 혁신활동을 통해 발생한 지적·경제적 성과를 말한다. 투입은 구체적으로 R&D, 재원, 인적 자본 등 3종류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출은 혁신 성과와 경제적 효과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울 혁신지수는 총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투입과 산출의 세부지표 수는 각각 11개로 동일하다.

2.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분류·정의

서울 혁신지수에서 고려하는 혁신 산업의 범위를 서울형 7대 유망 산업^① 중 혁신과 관련이 있는 산업 일부로 한정하는 경우 혁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른 산업들(예: 반도체, 정밀기기, 정밀화학,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대거 성과 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혁신 성과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지식기반산업 전체 및 취사 선별되지 않은 서울형 유망산업 전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혁신과 관련이 적은 산업(예: 운송업, 건설업, 음식점업, 주점업 등)들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어 혁신 성과가 과대평가되고 나아가 혁신지수의 논리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산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산업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중 혁신과 관련된 세부산업들을 선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울 혁신지수의 지식기반 제조업 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한 지식기반 제조업 9대 산업군을 근간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의 제조업 부문이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서울 혁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산업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R&D, 바이오·의료, MICE·관광, 문화·레저, ICT+도심제조, 교육서비스, 도시재생·건축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 제조업 산업별 세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된 코드를 기준으로 정의
-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 화학, 생물 산업, 정밀 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 9개 산업군
- 서울형 유망산업인 바이오·의료산업 세부 업종 중 기존의 지식기반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의료기기, 부속품 제조 업종을 정밀기기 산업에 추가²⁾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5대 산업군을 기반으로 하되, 서울형 7대 유망산업의 서비스업 부분이 기존에 정의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구체적인 산업 분류는 서울 혁신지수 전체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산업 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²⁾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³⁾ 음식점 및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공운송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공연시설운영업, 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⁴⁾ 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호텔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지식기반 서비스업 산업군별 세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된 코드를 기준으로 정의
- 정보 서비스업, R&BD(사업 지원 서비스업), 문화 서비스업, 관광·레저·MICE 서비스업, 보건·의료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6개 산업군
- 서울형 유망산업 중 교육서비스, MICE, 보건·의료 서비스는 위에서 정의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산업들을 새로 정의하여 기존 산업군에 포함함. R&D는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므로 기존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R&D보다 포괄적인 R&BD로 새롭게 정의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포함
- 보건·의료 서비스는 병원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유망 사업 모델로 선택한 노인요양시설, 홈케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까지 확장하여 포함
- MICE는 정부 범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실이 2009년 발표한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되어 이후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안)>(2009,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분류되고 산업연구원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MICE·융합관광 세부 산업 중³⁾ 중 혁신지수의 성격에 맞는 산업들을 기존의 분류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부 선별⁴⁾하여 포함

3. 서울 혁신지수 산출 방법

단일 도시의 혁신 역량 시계열 추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혁신지수는 자료의 성격과 지표에 목적에 맞도록 Distance to a Reference Method, 즉 2010년을 기준치 100으로 둔 후 각 연도의 값을 이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표준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뉴욕혁신지수, KOSPI 지수, 산업생산지수 등 유사한 목적을 갖는 지수 산출에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계산이 쉽고 결과가 안정적이며 결과 해석이 직관적이고 쉽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혁신지수의 가중치 배분과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 총합을 1로 두고 2개의 대부문(투입, 산출)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해당 50%를 각 중부문에 동일하게 나누어 분배하였다. 예를 들어 투입은 R&D, 재원, 인적 자본에 각각 16.7%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산출 부문은 혁신 성과, 경제적 효과에 각각 25%의 가중치가 분배된다. 세부지표의 산출 평균값이 중부문 값이 되며 전술한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구한 가중 평균치가 각각 대부문과 최종 지표 값이 된다.

*** Distance to a Reference Method**

$$\text{표준화 산식} : Y_i^t = \frac{X_{i,r}^t}{X_{i,r}^{t_0}} \times 100$$

(여기에서, x는 원지표, Y는 표준화된 값, t는 자료의 해당 연도, i는 지표 항목, r은 복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각 지역 구분 단위, t₀은 기준연도(서울 혁신지수의 경우 2010년), 이하 산식에서도 동일)

- 비례식 원리에 따라 기준연도의 값을 100으로 설정한 후 타년도의 값을 기준연도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방법이며,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널리 쓰임
- 시계열 자료가 새로 추가되더라도 기존의 지표 값에 변동이 없으며 산출 방법이 간단하고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계열 자료 분석에 적합하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 가능

〈표 2〉 서울 혁신지수 가중치 배분

최종 지표	대부문	중부문	세부 지표 가중치
서울 혁신지수 - 22개 (100%)	투입 - 11개(50%)	R&D - 3개(16.7%)	1/18
		재원 - 4개(16.7%)	1/24
		인적 자본 - 4개(16.7%)	1/24
	산출 - 11개(50%)	혁신 성과 - 5개(25%)	1/20
		경제적 효과 - 6개(25%)	1/24

Ⅲ. 서울 혁신지수 산출 결과

1. 서울 혁신지수 지표 부문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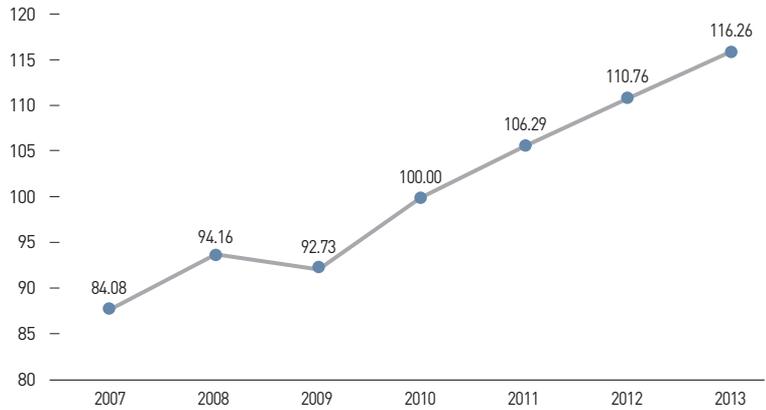
1) 투입

(1) R&D

서울시의 R&D 투자는 2009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부문 R&D 투자의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가 공공부문 R&D 투자의 성장세 감소,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의 상대적 수준 감소를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R&D 투자는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빠른 상승을 이어가다 최근 들어 그 성장세가 둔화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R&D 투자 수준 증가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증가율을 지속하기 힘들어졌다는 점, 공공부문이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점, 지방 균형발전과 연구단지 조성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서울 지역에서 감소한 점, 서울시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공공부문 R&D 투자의 증가세가 점차 감소한 것에 반해 기업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에 빠른 성장이 두드러진다. 서울 혁신지수가 고려 기간으로 삼고 있는 2007~2013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기 충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기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한 것이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거두었고,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부문의 R&D 투자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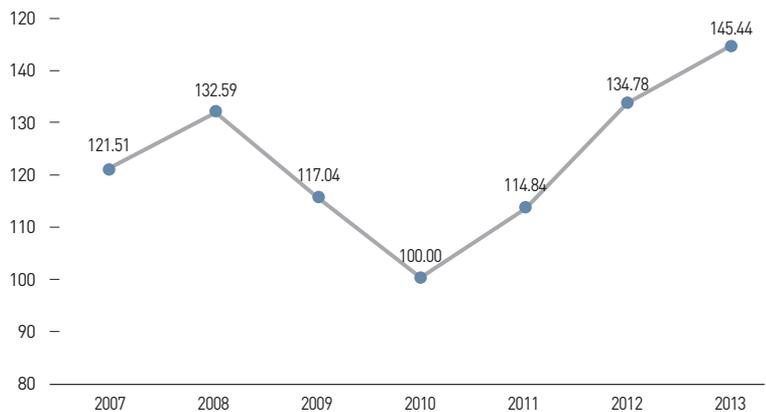
전국 R&D 투자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충청권을 중심으로 기업, 공공부문 연구단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해당 지역의 R&D투자가 증가하고, 중앙 정부가 다른 지자체로의 R&D 예산을 확대한 것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연구개발 활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유치, 임대료 보조 등의 지원을 통한 입지 경쟁력 확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R&D 추이

(2) 재원

재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하다 그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전국 벤처캐피털 조성액 중 서울시 조성액 비중도 완만히 감소하였다. 이들 항목의 감소 효과가 해당 기간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시현한 서울시 벤처캐피털 조성액, 기술보증기금 보증공급 금액 항목의 영향보다 커서 해당 기간 재원 항목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서울시 벤처캐피털 조성액도 증가하면서 재원은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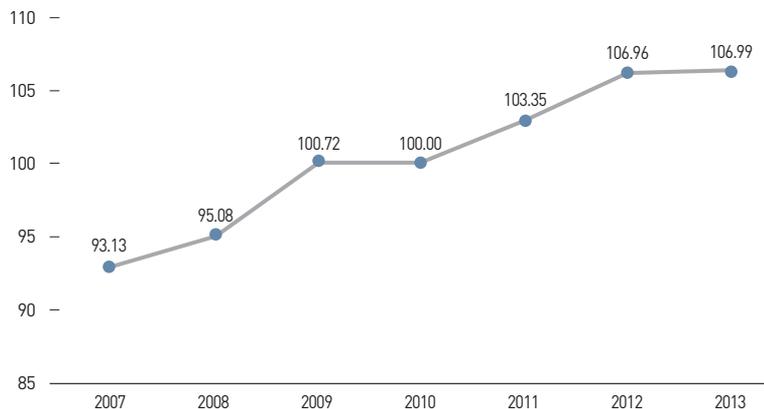
〈그림 2〉 재원 추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조성된 벤처캐피털 총량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

국 대비 서울시 벤처캐피털 비중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추가적 자료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서울시가 갖는 투자처로서의 상대적 매력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가 연구개발 장소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고 있기에 절대적 벤처캐피털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조성액 대비 서울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승했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반전되어 2013년까지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기술보증 공급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3)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2010년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연구원 수, 지식산업 활동 기업의 수 등은 해당 기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공계 대학원생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국 연구원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는 2007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림 3〉 인적 자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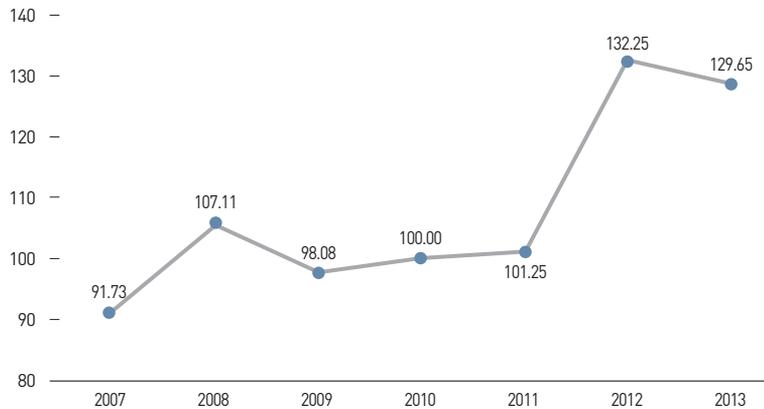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서울시 연구원의 절대적 수준은 2007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나 다른 지역 대비 서울시 연구원 수는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R&D 투자, 벤처캐피털 조성액 등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이공계 대학원생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0년 감소한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 지식산업 활동 기업의 수는 200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나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식산업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신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입하다가 최근 그 성

장세가 한풀 꺾였다. 이는 기업 수의 증가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점차 심화되어 신규 기업 진입 역시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 산출

(1) 혁신 성과

혁신 성과는 2008년도에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게재와 기술료 수입 부문의 실적을 바탕으로 반짝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대체로 보합세에 가까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 사업화 건수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관리 과제 성과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 혁신 성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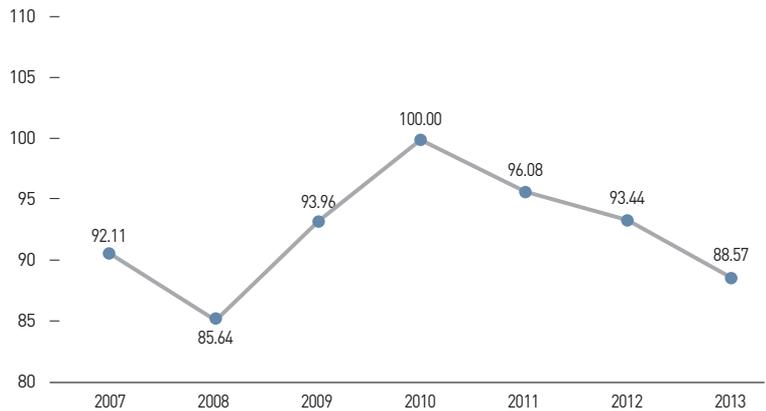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연구 개발 성과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SCI논문 게재 건수, 기술료 수입, 사업화 성과는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기술료 수입과 SCI 논문 게재 건수의 증감이 2008~2011년 사이에 발생한 감소 후보합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사업화 성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1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혁신 성과부문의 빠른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SBA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업성과는 고려 기간 감소세에 있는 반면, 국가 관리 연구 과제의 성과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부문(지방 정부+중앙 정부) 관리 과제 성과는 지방 정부의 혁신 투자 위축에 따른 지자체 연구개발 성과의 부진을 중앙 정부 연구 과제들의 성과로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는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서울시 혁신기업의 수, 지식산업 종사자 수가 2010년까지 증가하며 다른 분야의 감소, 증감을 만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벤처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비중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GRDP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지식기반 제조업 GRDP가 2009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한편, 지식기반산업의 종사자 수는 해당 부문의 규모 확대에 따라 꾸준히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벤처기업 수출액은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크게 감소하여 2013년도의 수출액은 2007년 수출액의 1/2 수준에 불과하며, 서울시 혁신기업의 수와 고성장 기업의 비율 역시 2010년 이래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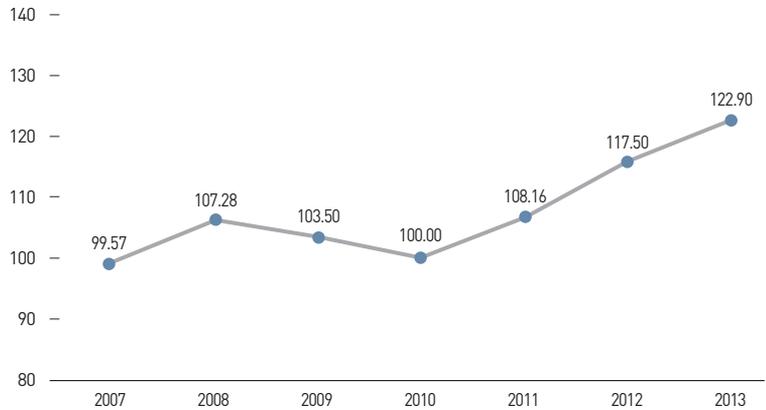
〈그림 5〉 경제적 효과 추이

2. 서울 혁신지수 투입·산출 및 종합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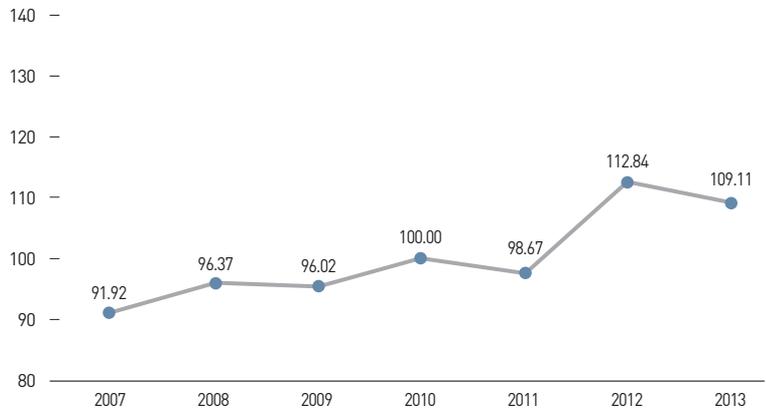
R&D, 재원, 인적 자본으로 이루어진 투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적 자본과 R&D 부분은 2007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재원은 2010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상승하였고, 투입 전체의 추세는 이와 같은 부문별 양상의 결합 효과를 반영한다. 요컨대, 서울시의 혁신 투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0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R&D, 재원, 인적 자본 전 부문에서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 성과, 경제적 효과로 이루어진 산출은 2008년 이후 격년 단위로 증가하는 계단식 증가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2010년까지 증

가하다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혁신 성과는 2008년 반짝 증가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1년까지 전반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2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 두 부분의 효과가 결합하여, 서울시의 혁신 산출 전체는 2011년까지 다소의 증감을 반복하며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2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한다.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연구과제에서의 양호한 성과가 혁신 성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의 GRDP 총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혁신 기업, 고성장 기업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은 앞 절에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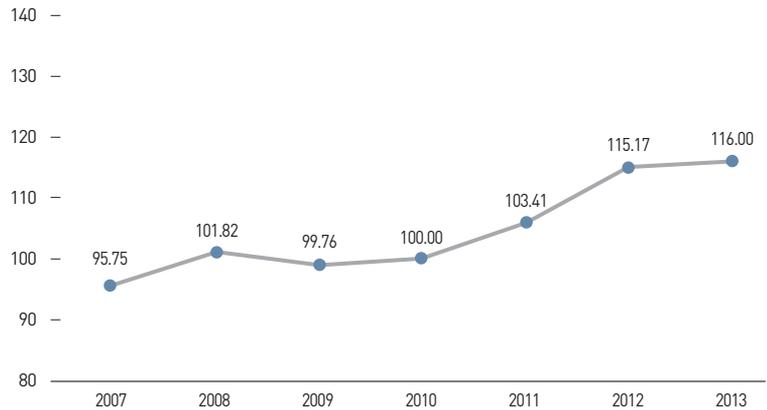
〈그림 6〉 혁신 투입 추이



〈그림 7〉 혁신 산출 추이

투입, 산출 모두를 종합한 종합 혁신지수의 추이는 〈그림 8〉과 같다. 2008년에 있었던 투입 부문에서의 일시적인 증가가 반영되어 종합 지수 역시 2008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1년까지 답보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투입 부문에 발생하였던 2010년까지의 감소세와 산출 부문의 2011년까지

의 완만한 증가세가 결합된 효과로 판단된다. 2012년 산출 부문의 가파른 상승, 2010년 이후 투입 부문의 꾸준한 증가가 결합하여 종합 혁신지수는 2012년에 크게 증가하며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종합 혁신지수 추이

〈표 3〉 각 부문 및 투입, 산출, 종합 혁신지수 연도별 추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R&D	84.08	94.16	92.73	100.00	106.29	110.76	116.26
재원	121.51	132.59	117.04	100.00	114.84	134.78	145.44
인적 자본	93.13	95.08	100.72	100.00	103.35	106.96	106.99
혁신 성과	91.73	107.11	98.08	100.00	101.25	132.25	129.65
경제적 효과	92.11	85.64	93.96	100.00	96.08	93.44	88.57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입	99.57	107.28	103.50	100.00	108.16	117.50	122.90
산출	91.92	96.37	96.02	100.00	98.67	112.84	109.11
종합	95.75	101.82	99.76	100.00	103.41	115.17	116.00

IV. 결론

서울 혁신지수 분석 결과 서울시의 연구개발투자액과 활용 가능한 재원의 절대적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국 수준과 대비한 서울시의 상대적 혁신 투입은 연구개발투자, 벤처캐피털, 전문 연구원의 수 등 지표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이가 다른 지역의 경쟁력 확보의 결과인지, 서울시가 투자처로서 갖는 상대적 이점이 줄어든 결과인지 혹은 중앙 정부의 산업 정책에서 서울시가 받는 역차별의 결과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고 혁신역량을 계속해서 제고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양질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우수한 물적, 인적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활발한 교류와 평등한 지식 접근 기회, 실패 후 재기가 가능한 경영 환경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업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창업과 기업가 정신, 혁신 성과의 고른 분배 등과 같은 무형적 혁신 인프라까지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서울시의 혁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면 물적 투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적인 혁신 문화의 구축과 혁신 지면의 확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R&D·교육·사회 안전망·중소기업 지원·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번 지수에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서울 혁신지수 역시 통계자료 구축과 지표 보완을 통해 상기한 무형적 혁신 인프라 및 혁신의 질적 성과를 지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시의 전반적인 산업 역동성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 비전 2030,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산업거점 조성, 도심 산업 육성, 혁신형 창업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비전을 세우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GDP 성장 및 고용 창출을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최근 국내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쟁력 있는 중소 혁신형 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단, 연구개발 활동이 유형적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 초기에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혁신 투자의 단기적인 성과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목표하에서 도시의 혁신 잠재력과 혁신 문화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부록

1. 서울 혁신지수와 뉴욕 혁신지수 대응표

<부록 표 1> 뉴욕 혁신지수 대응표

구분	뉴욕 혁신지수		서울 혁신지수	
투입	R&D	1. 뉴욕시 기관 단체들의 R&D 투자 2. 미국 전체 R&D 투자 대비 뉴욕시 R&D 투자	1. 서울시 공공부문 R&D 투자 2. 서울시 기업부문 R&D 투자 3. 전국 R&D 투자 대비 서울시 R&D 투자	R&D
	자원	3. 뉴욕시 벤처캐피탈 조성액 4. 뉴욕시 벤처캐피탈 지원건수 5. 미국 총 벤처캐피탈 조성액 중 뉴욕시 비중 6. 미국 총 벤처캐피탈 지원건수 중 뉴욕시 비중 7. SBIR/STTR : 뉴욕시 기업 지원액 8. SBIR/STTR : 뉴욕시 기업 지원건수 9. SBIR/STTR : 미국 총 기업 지원액 중 뉴욕시 비중 10. SBIR/STTR : 미국 총 기업 지원건수 중 뉴욕시 비중	4. 서울시 벤처캐피탈 투자액 5. 전국 벤처투자액 대비 서울시벤처투자액 6. 기술보증기금의 서울소재기업 보증 공급액 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원
	인적 자본	11. 뉴욕시의 이공계 종사자 수 12. 뉴욕시 민간부문 총 고용 대비 이공계 고용 비율 13. 뉴욕시 과학, 공학 분야 대학원생 수 14. 미국의 총 이공계 대학원생 수 대비 뉴욕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8. 서울시 연구원의 수 9. 전국 총 연구원의 수 대비 서울시 연구원의 수 10. 서울의 이공계 대학원생 수 11. 서울의 지식산업분야 활동 사업체 수	인적 자본
산출	지역 재산권	1.뉴욕시 과학자들의 총 특허 출원 건수 2. 특허의 기술적 다양성 지수 3. 특허 출원 기업 다양성 지수 4. 특허의 독창성 지표 5. 특허의 일반성 지표 6. 대학특허권 : 뉴욕시로 유입되는 특허권 수입 7. 대학특허권 : 미국 전역 특허 수입 대비 뉴욕시 비중 8. 대학특허권 : 미국 전체 특허 건수 대비 뉴욕시 비중	1. 서울시 지식재산권 총 출원 건수 2.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특허 출원 건수 3.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SCI 논문 수 4.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기술료 수입 5. 서울시 공공부문 관리 사업화 건수	혁신 성과
	하이 테크 지역 총생산	9. High-Tech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당 GRDP 10. 뉴욕시 전체 GRDP 중 High-Tech 분야 GRDP 비중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경제적 효과
	기업가 정신 & 고용 역동성	11. 뉴욕시 하이테크 분야로의 종사자 유·출입 증감 12. 뉴욕시 사업체의 하이테크 분야로 유·출입(Churning) 13. 뉴욕시 하이테크 산업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 비중 14. 뉴욕에 본사를 둔 회사의 평균 시가총액 비중 15. SBIR/STTR : 2년 내에 2단계 지원을 받을 가능성 16. SBIR/STTR : 2단계 지원에 의해 지원된 총액 17. 벤처캐피탈 : 2년 내 다음 자본 조달 단계로 진입가능성 18. 벤처캐피탈 : 다음 자본조달 단계에서 조성된 벤처자본 총량 비중	8. 서울시 전체 기업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 비중 9. 서울시 지식산업 총 종사자 수 10. 서울시 혁신 기업의 수 11.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6.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제조업 GRDP 7. 서울시 GRDP 대비 지식기반 서비스업 GRDP 8. 서울시 전체 기업 총 수출 대비 벤처기업 수출 비중 9. 서울시 지식산업 총 종사자 수 10. 서울시 혁신 기업의 수 11. 서울시 매출액 고성장 기업 비중	

참고문헌

1. 김묵한, 2013,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1) : 지식기반 제조업”, 서울연구원
2. 김묵한, 2013,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2) : 지식기반 서비스업”, 서울연구원
3. 김범식 외, 2010, “서울시 지식기반 제조업의 R&BD 역량 강화방안”, 서울연구원
4. 김용희, 2012, “COST를 활용한 OECD 국가 유형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미래창조과학부, 2007-2013,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6. 심민수 외, 2013,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측정 방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7. 안병민, 2013,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KISTEP
8. 안혜린, 2010,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KISTEP
9. 오영수 외, 2005, “한국의 지역혁신 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
10. 장재홍, 2006a,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간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대응”
11. 장재홍 외, 2006b, “혁신활동의 지역 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12. 주혜정, 2011,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 지표 종합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역량지표 개선 및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 KISTEP
13. 지식경제부, 2009,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분류(안)”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b, 「산업기술혁신통계 체제개발 및 지표설계」
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객관적 산업기술 혁신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적 검토」
16. EC, 2004 - 2014, 「Innovation Union Scoreboard」
17. EC, 2012, 「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18. INSEAD/WIPO-Johns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Cornell University, 2014,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4」
19. Jan Fagerberg · Bart Verspagen, 2009, 「Innovation studies—The emerging structure of a new scientific field」
20. NYCEDC, 2011, 「NYCEDC Innovation Index」
21. OECD, 2005, 「Oslo Manual: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Interpreting Innovation Data, 3rd Edition」
22. OECD,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23. Schumpeter, J. A. 1934(original German edition published in 1912),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인포그래픽스



서울 시민들은 올해의 소득과
소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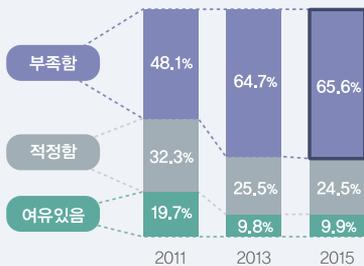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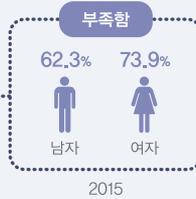
서울 시민들은 올해의 소득과 소비 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시민들은 올해의 소득과 소비 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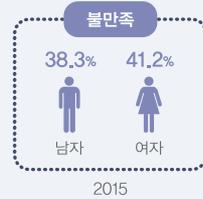
주관적 소득 수준



주관적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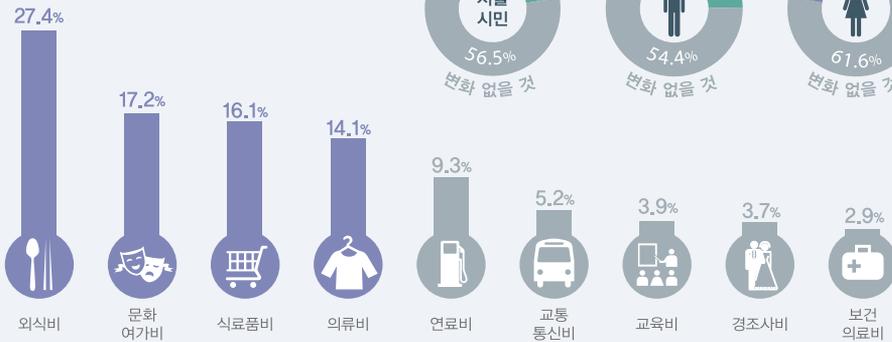
주관적 소비 생활 만족도



내년도 가구 재정 상태에 대한 기대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 항목



주: 2015년 사회조사는 전국 18,57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5. 5. 14~5. 29(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며 서울의 소득과 소비 부문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4,19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통계청(2015), 사회조사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dhcho@si.re.kr /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소득 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은 2011년(48.1%)보다 2015년(65.6%)에 크게 증가

소득과 소비 생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서울 시민의 65.6%가 소득 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함', '여유 있음' 응답은 34.4%에 불과

- 2015년 서울 시민 중 소득 수준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65.6%로 지난 4년간 17.5%p 증가하였으며, 여유있다는 응답은 2011년 19.7%에서 2015년 9.9%로 크게 감소
- 서울시민 중 여성의 73.9%, 남성의 62.3%가 소득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41.2%가 소비 생활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남성(38.3%)보다 소비 생활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서울 시민의 56.5%가 내년도 가구 재정 상태는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가구 재정 상태에 대한 기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남성의 24.7%는 내년에 가구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4.4%가 변화 없을 것, 20.8%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함
- 이에 반해 여성의 16.2%가 좋아질 것, 61.6%가 변화 없을 것, 22.1%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자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 항목은 '외식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지출 항목으로는 외식비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문화여가비 17.2%, 식료품비 16.1%, 의류비 14.1% 순으로 먹고, 보고, 입는 것 위주로 삭감 예정

〈표 1〉 서울 시민의 주관적 소득 수준

[단위: %]

		여유있음	적정함	부족함
2011	합계	19.7	32.3	48.1
	남자	21.6	32.7	45.7
	여자	14.1	31.2	54.6
2013	합계	9.8	25.5	64.7
	남자	10.9	26.8	62.3
	여자	6.9	22.2	70.8
2015	합계	9.9	24.5	65.6
	남자	11.7	26.0	62.3
	여자	5.4	20.7	73.9

주 2015년 사회조사는 전국 18,57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5. 5. 14.~ 5. 29.(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며, 서울의 소득과 소비 부문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4,19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표 2〉 서울 시민 소비 생활 만족도

[단위: %]

		만족	보통	불만족
2015	합계	16.0	44.2	39.8
	남자	16.9	44.8	38.3
	여자	15.1	43.6	41.2

주 2015년 사회조사는 전국 18,57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5. 5. 14.~ 5. 29.(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며, 서울의 소득과 소비 부문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4,19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통계청(2015), 사회조사

〈표 3〉 서울 시민 내년 가구 재정 상태에 대한 기대감

[단위: %]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악화될 것
2015	합계	22.3	56.5	21.2
	남자	24.7	54.4	20.8
	여자	16.2	61.6	22.1

주 2015년 사회조사는 전국 18,57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5. 5. 14.~ 5. 29.(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며, 서울의 소득과 소비 부문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4,19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통계청(2015), 사회조사

〈표 4〉 서울 시민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 항목

[단위: %]

항목	비중
외식비	27.4
문화여가비	17.2
식료품비	16.1
의류비	14.1
연료비	9.3
교통·통신비	5.2
교육비	3.9
경조사비	3.7
보건의료비	2.9
기타	0.3
합계	100.0

주 2015년 사회조사는 전국 18,576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5. 5. 14.~ 5. 29.(16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것이며, 서울의 소득과 소비 부문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4,19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통계청(2015), 사회조사





경제동향



요약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

수출입 수출입액/품목별 수출입/국가별 수출입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경제동향 | 요약

요약 | 10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산

- 서울의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6.4로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하여 생산 부진
- 10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재고지수는 11.4% 감소



소비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3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전국(6조 9,344억 원)의 33.7%를 차지
- 10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9.0%,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회복



고용

- 서울의 10월 취업자는 51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0.5%) 감소
-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9%p 각각 하락



물가

- 2015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4(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6% 소폭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
- 신선식품물가지수(6.6%), 서비스물가지수(2.6%), 생활물가지수(1.1%), 상품물가지수(0.1%) 모두 상승



부동산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전월 대비 0.43% 상승한 103.7 기록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직장인 유입에 따른 중소형 전세 수요 증가(강남권, 아파트, 연립주택 전세가격 상승(강북권)으로 전월 대비 0.57% 상승한 117.9 기록



금융

- 서울의 10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28조 7,632 원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
- 서울의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201조 1,293억 원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
- 서울의 10월 보증금액은 1,571억 원, 보증지원건수는 5,949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2.1% 증가, 3.8% 감소
-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 전 업종에서 신용보증공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6.7%, 60.9%, 66.6%, 32.3%로 모두 증가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보증지원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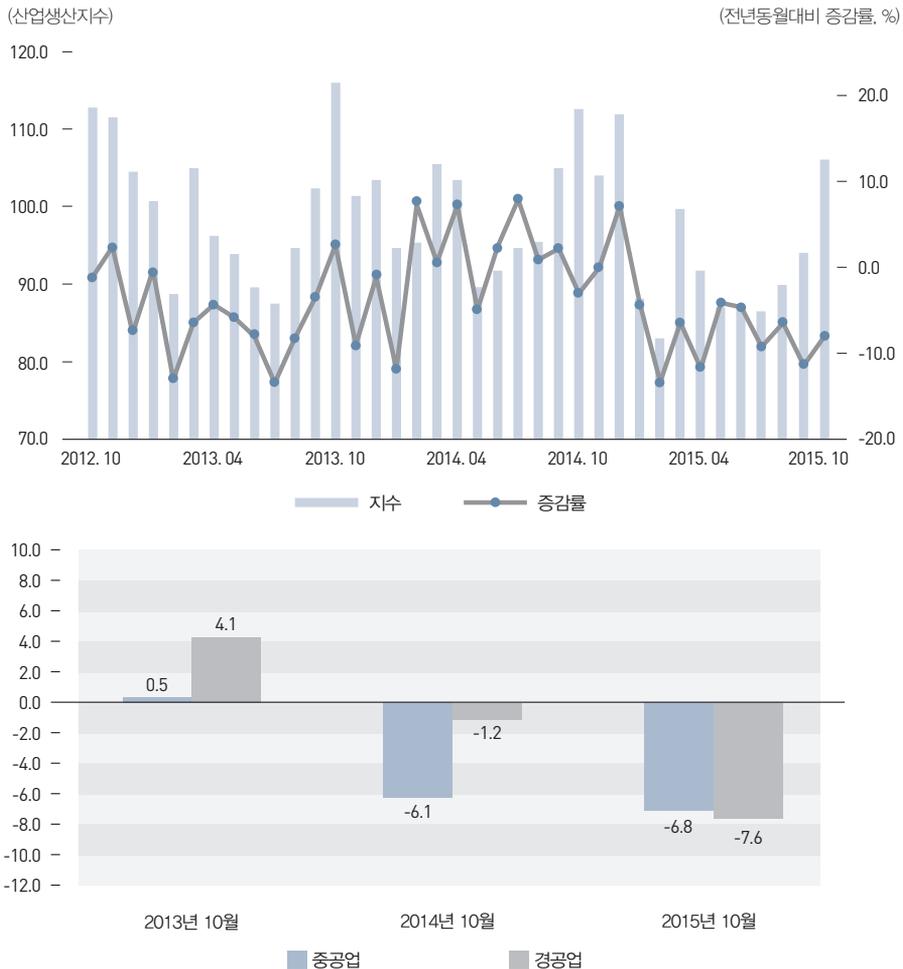
수출입

- 서울의 10월 수출은 57.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0월 수입은 10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생산

서울의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6.4(2010=100)로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

-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10월까지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
-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6.8%, 경공업은 -7.6%로 모두 감소하여 생산 부진
-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29.9%), 의료정밀광학(15.2%), 수도업(1.5%)등은 증가한 반면 가죽 및 신발(-42.9%), 인쇄 및 기록매체(-9.2%) 등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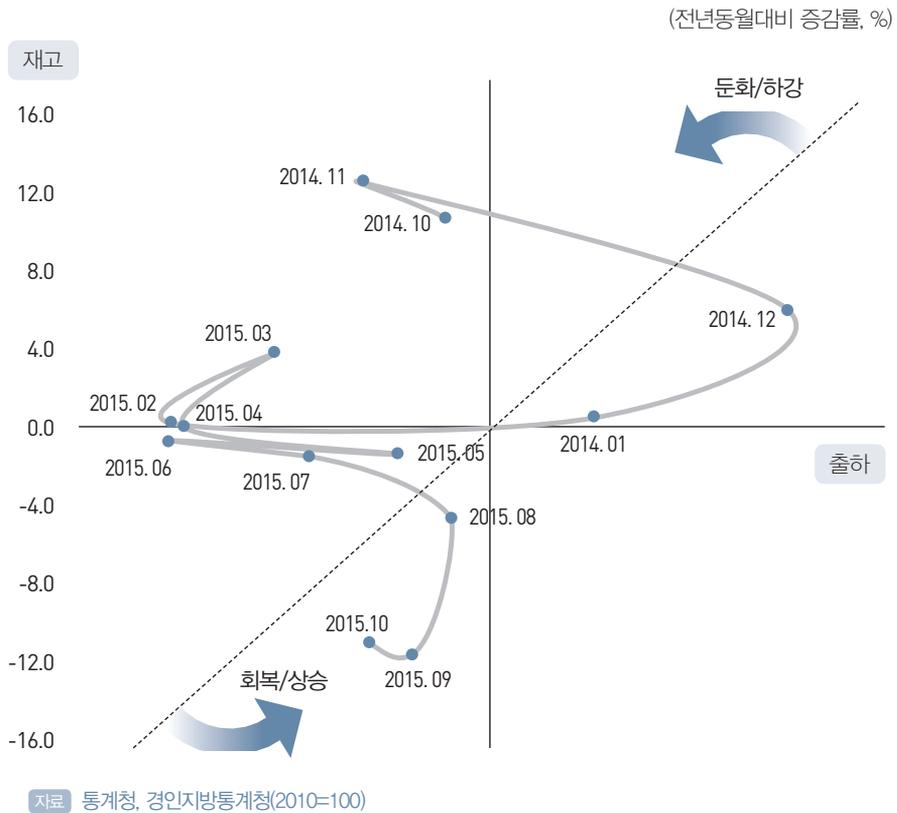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생산

출하·재고 순환

서울의 10월 제조업 출하지수와 재고지수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출하지수는 111.1(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 서울의 10월 재고지수는 117.9(2010=10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
- 3개월 연속으로 재고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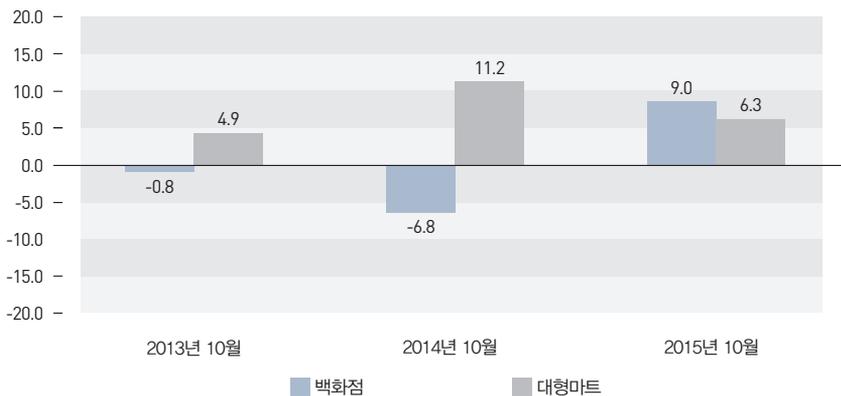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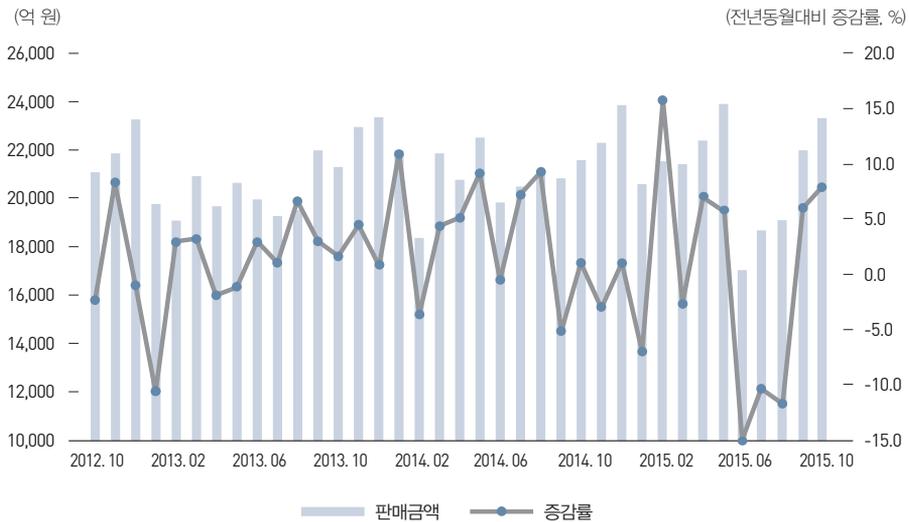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소비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

- 서울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380억 원으로 전국(6조 9,344억 원)의 33.7%이며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지만 전국(8.7%)보다는 소폭 증가에 그쳐
- 10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2,15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22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회복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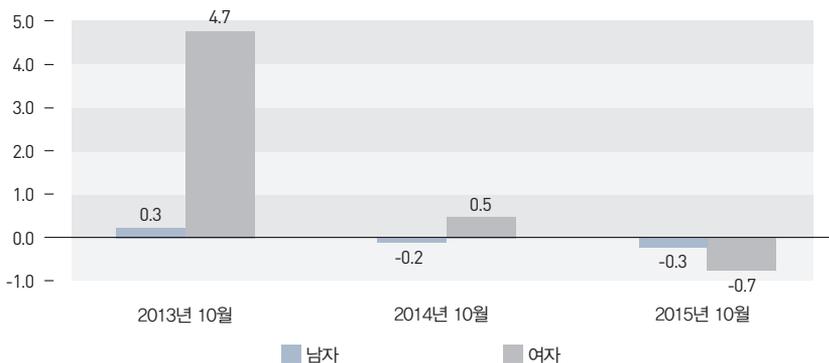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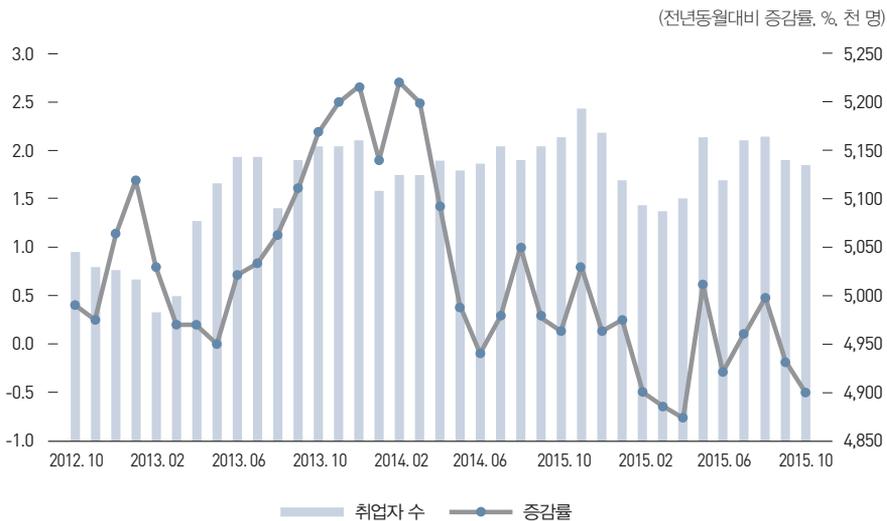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고용

취업자

서울의 10월 취업자 수는 51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

- 서울의 10월 취업자는 51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0.5%)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0.3%), 여자는 227만 6천 명으로 1만 6천 명(-0.7%)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만 4천 명(1.6%), 제조업이 1만 6천 명(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1만 5천 명(1.9%)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이 7만 2천 명(-4.9%), 건설업이 2만 3천 명(-6.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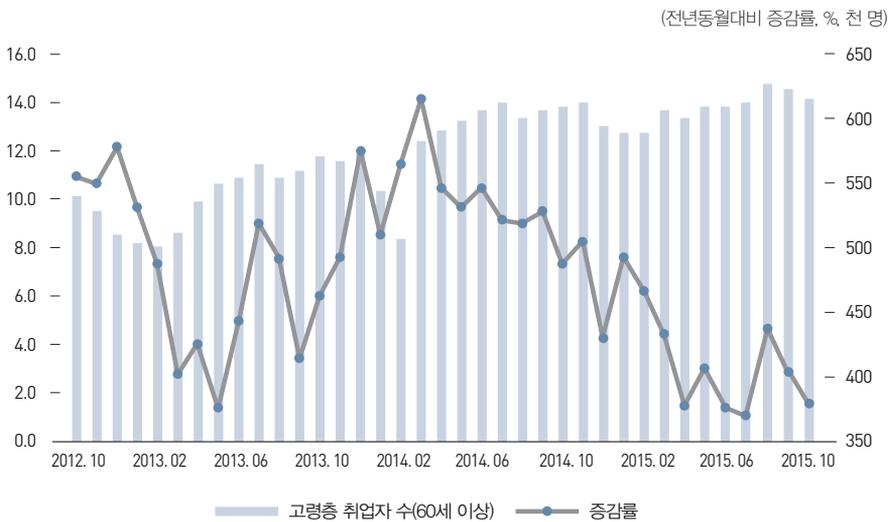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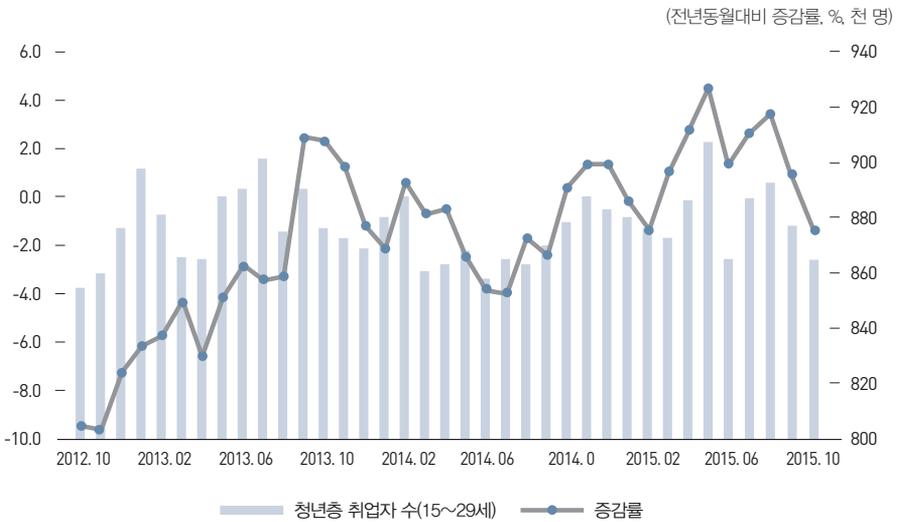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10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86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하여 3월부터 지속된 플러스 성장세가 10월 들어 마이너스로 반전
- 서울의 10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경제동향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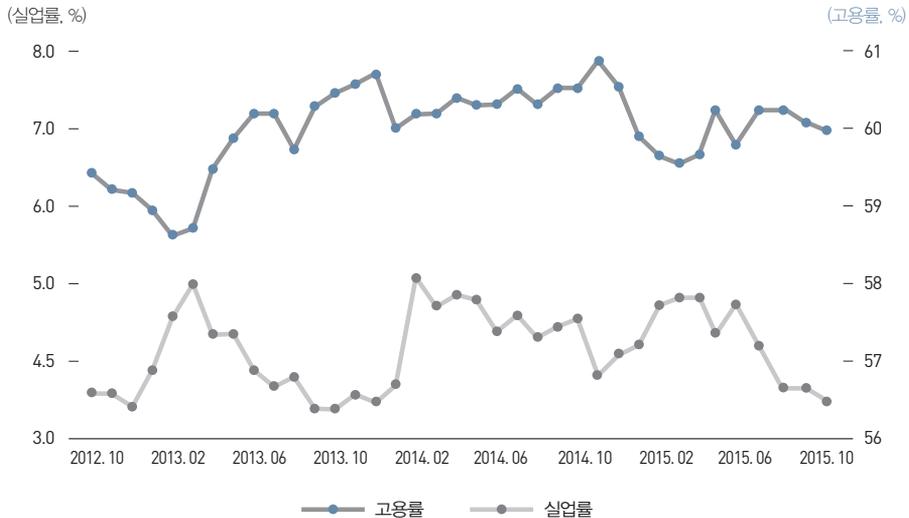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서울의 10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국 보다 낮은 수준

- 서울의 2015년 10월 고용률은 6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하였고 전국(60.9%) 보다 조금 낮은 수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8%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여자는 51.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각각 하락

서울의 10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0월 실업자는 19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2천 명(-21.5%) 감소
-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여자는 3.6%로 전년 동월 대비 1.0%p 각각 하락
- 2015년 10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1%)에 비하여 0.5%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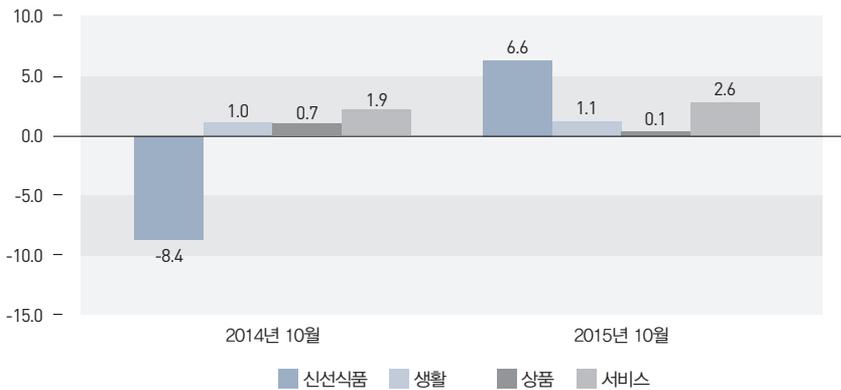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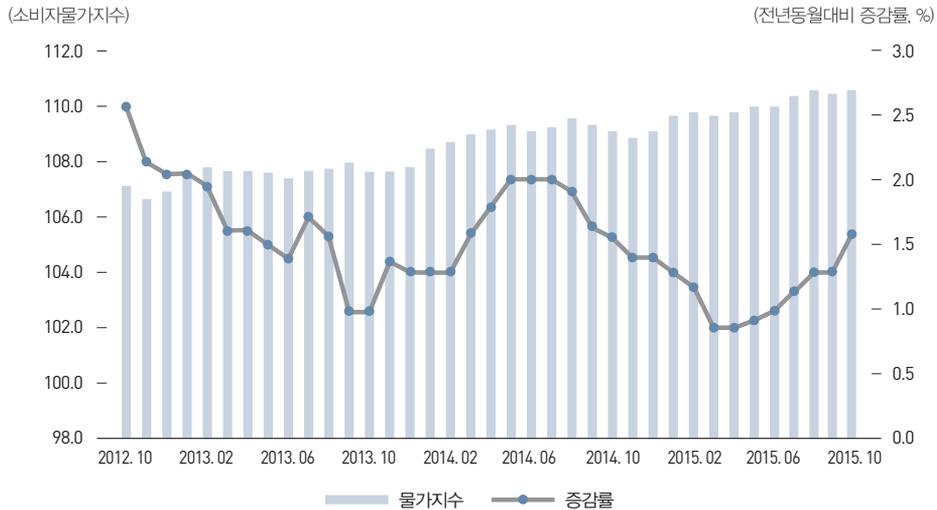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물가

서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 2015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4(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
- 전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신선식품물가지수(6.6%), 서비스물가지수(2.6%), 생활물가지수(1.1%), 상품물가지수(0.1%) 모두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경제동향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3.7로 전월 대비 0.43% 상승. 강남지역(0.64%)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전세물량 감소로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함. 강북지역(0.41%)은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가격과 높은 전세/매매가격 비율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주요 상승지역 : 강서구(0.73%), 강남구(0.64%), 중구(0.61%), 동대문구(0.59%)

전국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0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6.5로 전월 대비 0.34% 상승.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추석연휴와 10월 공휴일 등으로 영업일 감소로 상승폭이 축소됨. 수도권(0.37%), 5개 광역시(0.40%), 기타지방(0.18%)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도 전월 대비 증가

-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1,754만 원)은 전월 대비 0.6% 상승, 거래건수(11,602건)는 28.6% 증가
-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증가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거래건수도 증가

자료 부동산114

주택전세가격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7.9으로 전월 대비 0.57% 상승. 강남지역(0.60%)에서는 구로·영등포 지역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직장인이 유입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함. 강북지역(0.55%)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함
 - 주요 상승지역: 중구(1.00%), 영등포구(0.88%), 용산구(0.78%), 구로구·은평구(0.77%)

전국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0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0% 상승한 113.9을 기록. 저금리로 인한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과 가을 이사철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수도권(0.51%), 5개 광역시(0.35%), 기타지방(0.15%)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축소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10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도 전월 대비 증가

-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 (1,213만 원)은 전월 대비 1.8% 증가, 전세거래건수(9,526건)는 30.2% 증가
-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 거래건수가 7개월 만에 증가

자료 부동산114

경제동향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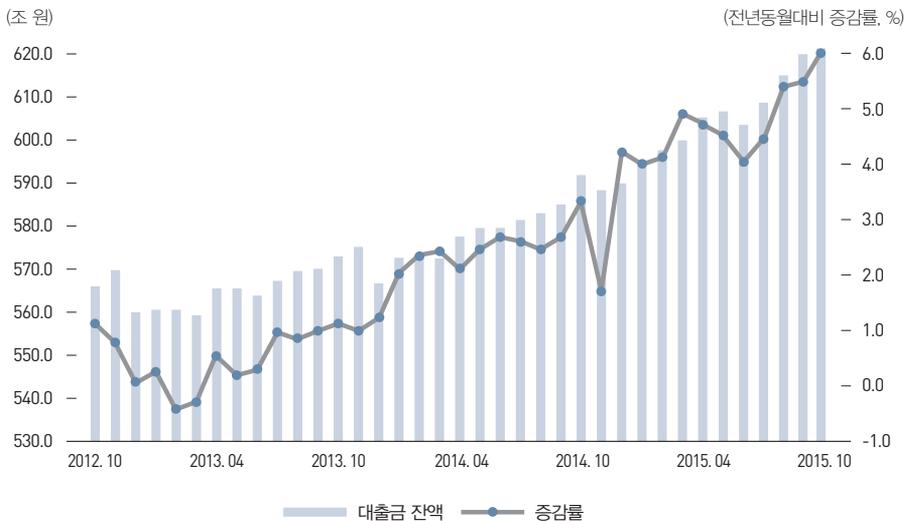
가계대출

10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628조 7,632억 원)은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 그 중 예금은행(523조 8,202억 원)과 비예금은행(104조 9,430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1.6%, 1.5%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2%, 0.03% 증가

10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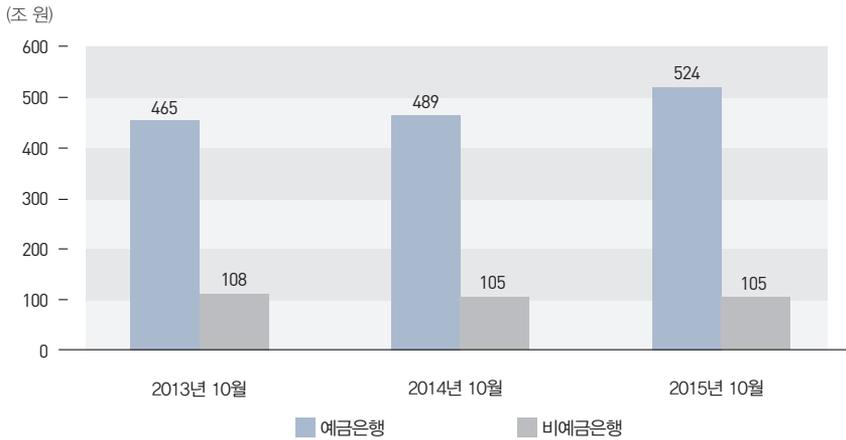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736조 5,014억 원)은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
- 그 중 예금은행(1,333조 4,395억 원)과 비예금은행(403조 619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1.4%, 1.3%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9%, 6.8% 증가



주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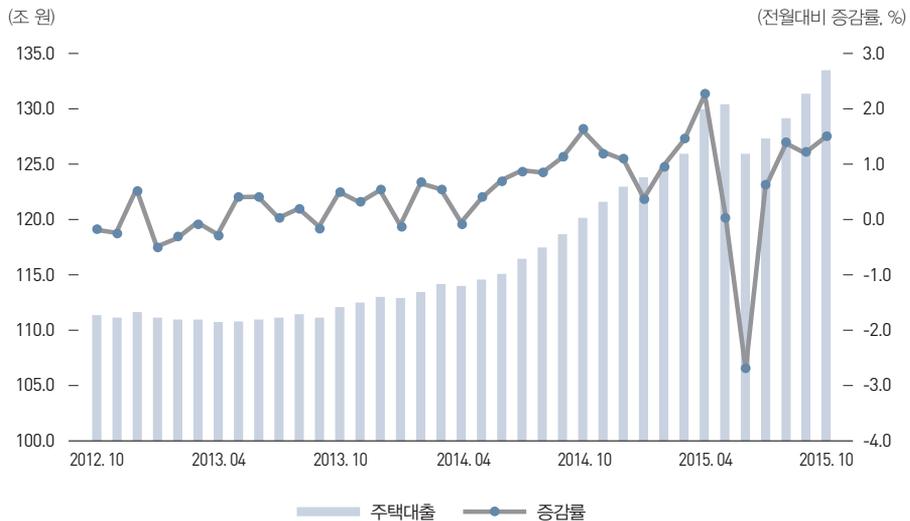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10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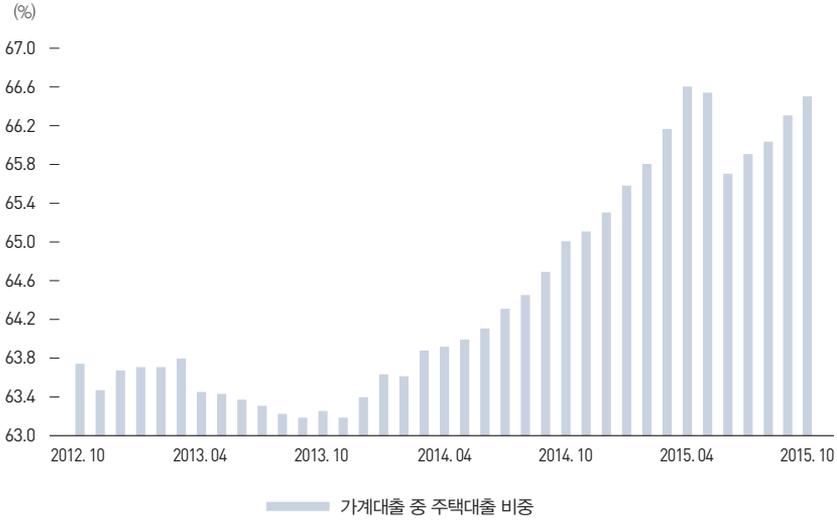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201조 1,293억 원)은 전월(198조 2,134억 원) 대비 1.5%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33조 6,987억 원)은 전월(131조 4,387억 원) 대비 1.7%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은 66.5%



주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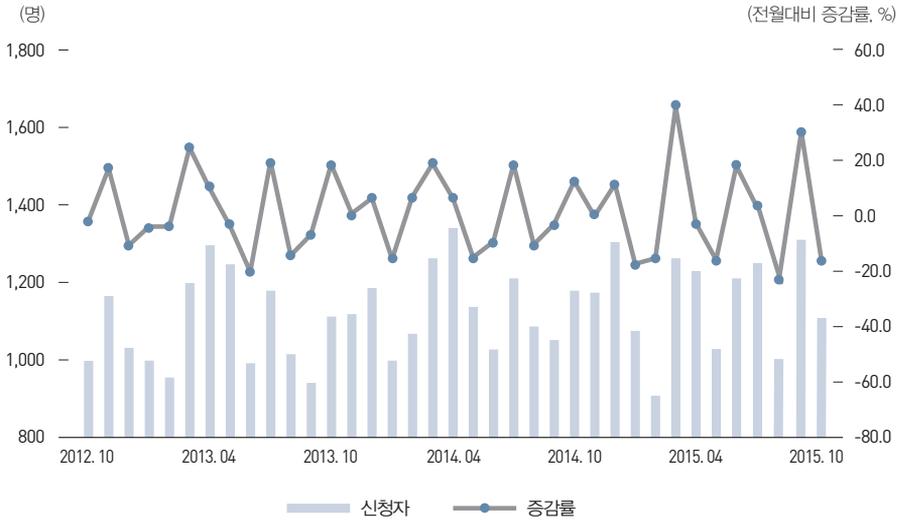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10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의 10월 개인파산 신청자(1,126명)는 전월(1,314명) 대비 14.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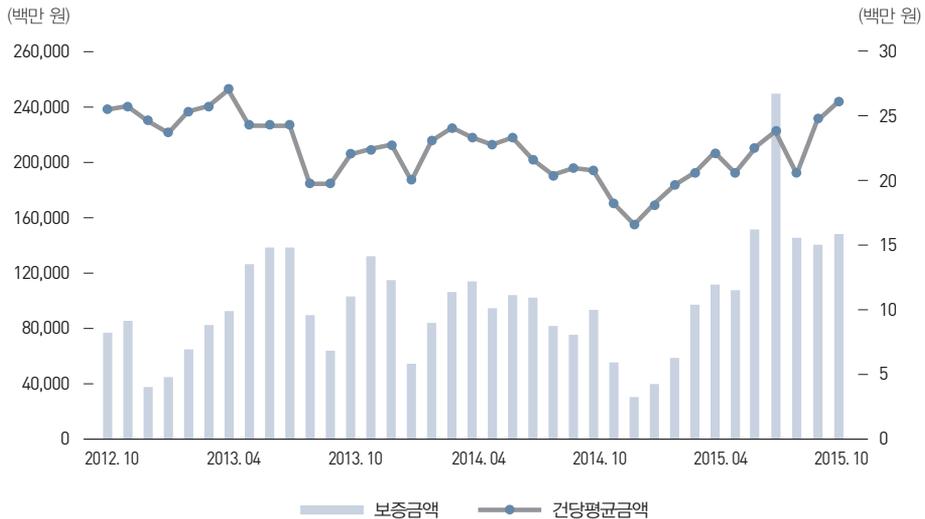
자료 대법원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신용보증

서울의 10월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전월 대비 증가, 보증건수는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0월 중 1,571억 원 / 5,949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2.1% 증가, 3.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4%, 23.8% 증가
- 건당 평균 지원금액(2,640만 원)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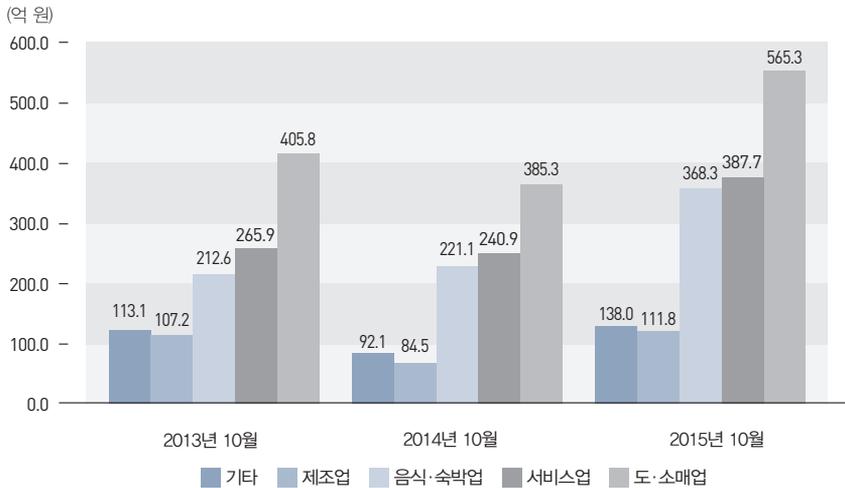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추이

전 업종에서 신용보증공급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

-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소매업(36.1%), 서비스업(24.8%), 음식·숙박업(23.5%), 건수 기준 도·소매업(29.0%), 서비스업(21.9%), 음식·숙박업(18.4%) 순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보증지원 금액은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46.7% 증가한 565.3억 원, 보증지원건수는 2,106건으로 전월 대비 2.6% 감소
- 서비스업(387.7억 원), 음식·숙박업(368.3억 원), 제조업(111.8억 원) 보증지원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0.9%, 66.6%, 32.3% 증가, 전월 대비 각각 15.7% 증가, 8.7% 감소, 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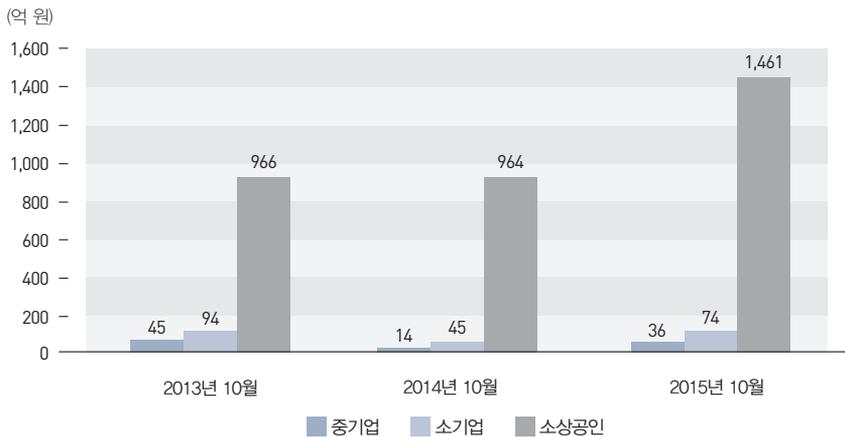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

- 소상공인에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1.6% 증가, 전월 대비 0.3% 증가한 1,461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3.0%를 차지.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97.1%인 5,779건
- 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1% 증가, 전월 대비 6.1% 증가한 74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7%를 차지.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2.4%인 141건
-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7.4% 증가, 전월 대비 186.3% 증가한 36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2.3%를 차지.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5%인 29건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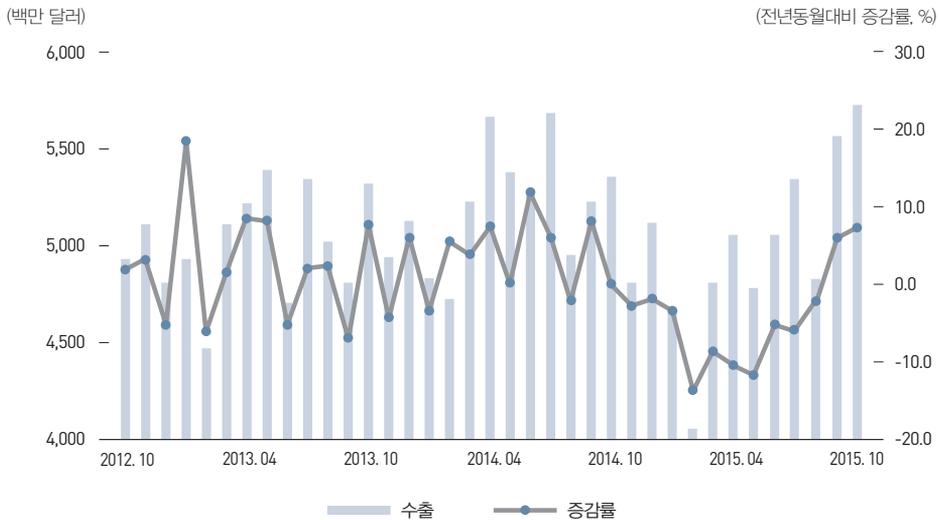
수출입

서울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57.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하였고, 수입은 10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34.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5.9% 감소하였고, 수입은 367.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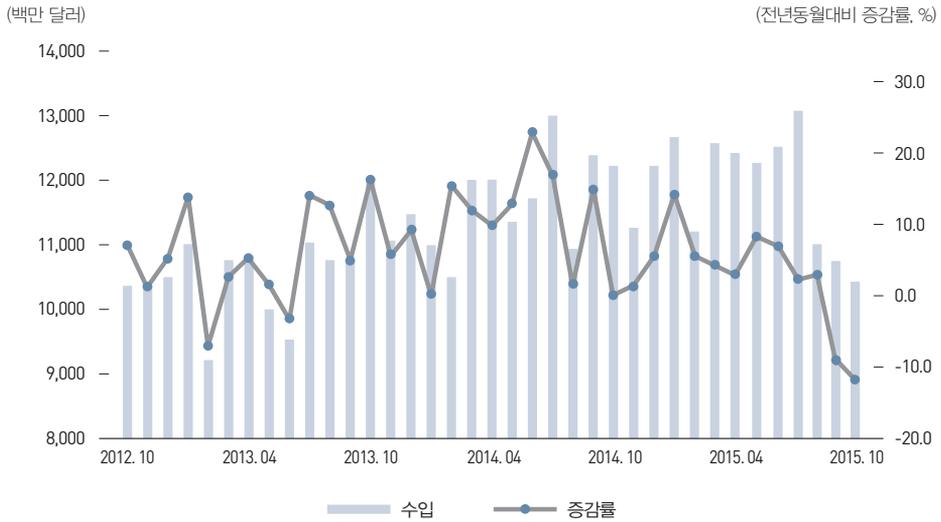
서울의 10월 수·출입 1순위는 무선통신기기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무선통신기기(1,267백만 달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영상기기 순으로 나타남. 특히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월 대비 59.0% 증가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무선통신기기(1,052백만 달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의류, 자동차 순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 미국으로부터 각각 무선통신기기, 항공기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하여 각각의 수입액이 전월에 비해 3배 가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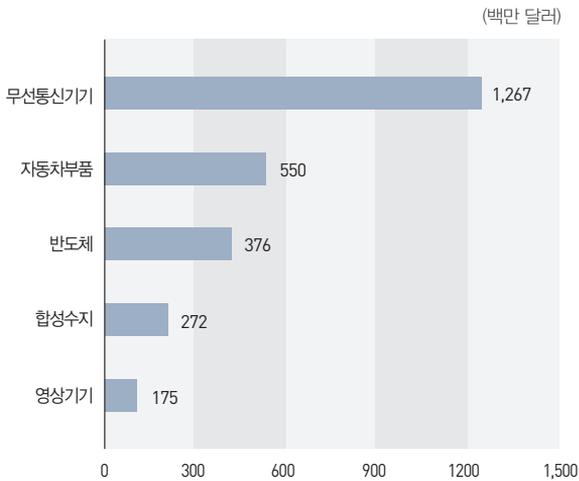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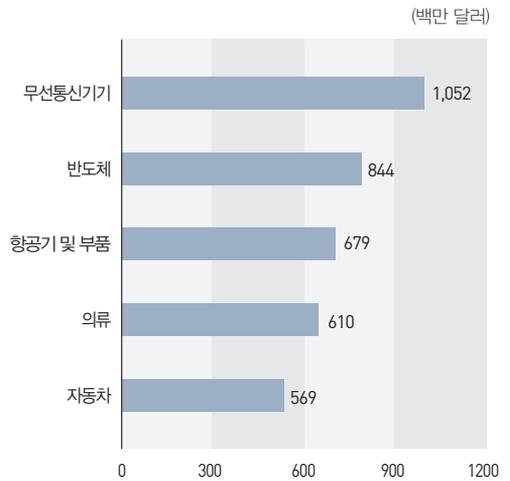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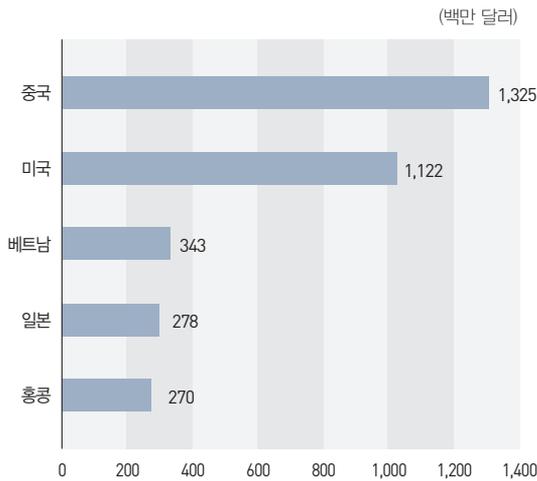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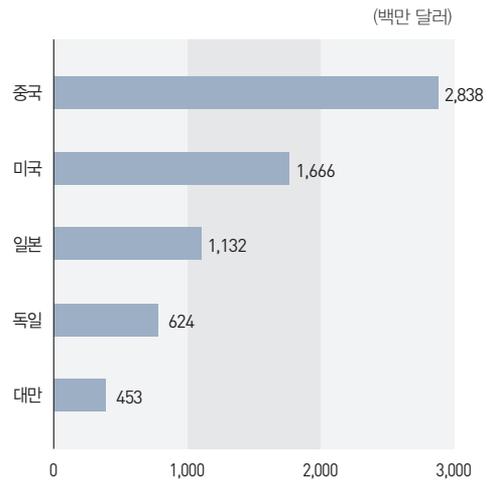
서울의 10월 수출·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한 1,325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8% 증가한 1,12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2,83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순
-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62.6% 증가하면서 대만이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



자료 무역협회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0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자료출처

자료출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0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0월 서울시 고용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0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 국민은행연구소, 『2015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대한민국 법원, 법원통계월보, 『<http://www.scourt.go.kr>』
- 부동산114, 『2015년 10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 부동산114, 『2015년 10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
- 서울신용보증재단, 『2015년 10월 신용보증동향』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 통계청, 『2015년 10월 산업활동동향』
- 통계청, 『2015년 10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15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입사부터 퇴사까지...필수노동법 해설서 발간
- 서울시, 2015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ZOOM IN

- 서울시, 사회적경제-사회책임조달 동반성장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대리점 1,864개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실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노동법 해설서 발간



알바청년·직장맘·고령근로자·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노동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노동법 필수 내용을 엄선하여 알려주는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발간된다.

서울시는 임금, 퇴직, 해고, 휴가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나 생소하고 어려웠던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 노동 권리장전’ 4,000부를 제작해 서울시청,

민간위탁업체(다산콜센터 등)를 비롯한 각급 학교(특성화고, 대학교 등) 및 노동관련 기관 등에 배부한다.

**3,900여 명의 시민과
450여 개
일자리제안 공유,
실질적 일자리대책
기반 마련**

‘서울 노동 권리장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간했던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서울형 노동법 안내서로, 법과 용어해석에 치우쳐 어렵기만 했던 기존의 노동법 관련 책자와 달리 입사에서 퇴직까지 일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는 것이다.

책자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주인공 장미생이 입사에서 퇴직까지 겪는 총 38개의 에피소드(284p)를 담았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팁’,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및 휴계시간’, ‘산재보상 및 산재급여’, ‘부당해고 구제 절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권리’,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기본법령부터 실제사례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근로자들의 궁금증도 해결해준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사용자의 법령 준수를 도모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를 위한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종 노동 교육 시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2015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지역 중대형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 3,560만 원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1층을 기준으로 평균 9,000만 원 정도이며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는 2.7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지역의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증금 평균
3억 3,560만 원,
계약기간
평균 6.1년, ㎡당
임대료 도심이
10만 5,800원 최고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의 점포는 전체의 77.7%인 3,910호였으며 4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1,255호(22.3%)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3,560만 원이며 ‘강남’이 5억 5,57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심’이 3억 7,415만 원, ‘신촌·마포’가 2억 8,669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기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현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은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은 5.5년, ‘신촌·마포’는 5.2년, ‘기타지역’은 6.3년이었다. 최소 현계약기간은 1.6년(서울역), 최대 현계약기간은 2.7년(명동)이며, 최소 총계약기간은 3.8년(공덕역), 최대 총계약기간은 8.1년(청량리)이었다.

㎡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 5,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강남’ 7만 7,600원, ‘신촌·마포’ 5만 1,600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3분기 대비 서울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평균 1.9% 상승한 가운데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인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ZOOM IN | 01

서울시, 사회적경제-사회책임조달 동반성장 위한 토론회 개최

사회적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책임조달 활성화와 발전전략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14일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와 사회책임조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조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책임조달’은 정부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 가격,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조달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년여 간 공공조달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구매 액수가 공공구매 총액 대비 1%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책임조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책임조달 관련 제도과 활성화 사업 성과 및 과제 논의, 지원체계 점검



토론회 1부 주제는 ‘제도와 성과관리, 지원 시스템’으로 정진우 과장(서울시 사회적경제과)의 ‘서울시의 사회책임조달 확산 정책 3년,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박태일 과장(성북구 사회적경제과)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이철중 대표(함께일하는세상)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단의 성과와 과제’ 발표가 있었다.

2부 주제는 ‘전략기획사업’으로 ▲우승주 단장(극단날오는자동차) ‘2015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박람회 성과와 과제’ ▲김석경 대표(행복ICT) ‘함께누리몰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이인재 교수(한신대학교)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 모색’ 발표가 진행됐다.

염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이번 토론회가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의견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나온 해법들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리점 1,864개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실시

As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장(대리점)이전에 대한 승인·영업직원 채용 등록 지연·거부 등으로 과징금 처분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본사에 직원등록을 신청했으나 8개월째 등록이 되지 않아 결국 채용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대리점 창업비용
2억 8,600만 원,
평균 계약기간
1.5년, 5명 중 1명
재계약 시 해지위협**

먼저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투자비용은 2억 8,600만원, 평균 계약기간은 1.5년이였다. 일반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에 이르는 138명은 재계약 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자(683명)의 31.3%(214명)는 계약기간 중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674명)의 18.8%(127명)는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대리점이 반품비용을 전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하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신제품·비인기 제품·재고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밀어내기'는 전체 응답자(686명)의 13.8%(9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금액은 월 평균 684만 3천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본사의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주들의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 및 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